

# 제 출 문

외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신남방정책의 심화를 위한 소다자협력 추진방안』의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09.

## 연세대학교

연구책임자 : 백우열(연세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원 : 우병원(연세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원 : 김명철(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 윤도원(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김동규(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환비(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조성빈(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 정유진(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외교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 신남방정책의 심화를 위한 소다자협력 추진방안

2020. 09.

수탁기관 : 연세대학교

외 교 부

## 목 차

요약문 .....	
I. 서론 .....	1
1. 연구 배경, 문제제기,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	5
II. 소다자주의 국제정치의 학술적, 정책적 개념화 및 배경 .....	7
1. 소다자주의 .....	7
2. 소다자주의의 전략적 강점과 역할 .....	11
3. 소다자주의의 전략적 약점과 한계 .....	11
III. 신남방정책 대상 동남아 국가 역내외 소다자협력 동향 .....	13
1.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소다자협력 구성 현황 분석 .....	13
1.1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13
1.1.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13
1.1.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15
1.2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미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18
1.2.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18
1.2.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22
1.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중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23
1.3.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23
1.3.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26

1.4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비미중-한국, 일본, 호주, EU, 인도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28
1.4.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28
1.4.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31
1.5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37
1.5.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37
1.5.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39
2.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 또는 대상으로 한 소다자협력 .....	40
2.1. 소다자협력의 특성(아세안 소다자 일반적 특성) .....	40
2.1.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40
2.1.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43
2.2. 소다자협력의 긍정적 역할, 전망(구성국가조합별 + 이슈별) .....	46
2.2.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경성비전통안보 소다자협력의 활성화 .....	46
2.2.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47
2.3 소다자협력의 부정적 한계, 전망(구성국가조합별 + 이슈별) .....	49
2.3.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49
2.3.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51
IV. 신남방 지역 대상 한국의 소다자협력 추진 방안, 로드맵 수립 (정책제안) · .....	52
1. 소다자 전략적 목표에 입각한 단계적 협력 추진 로드맵 원칙 수립 .....	52
2. 협력 대상(참여대상국x협력이슈/분야) 중심 소다자협력 추진 방안 분석 .....	52
3. 신남방정책에서의 소다자주의 기본 역할, 가능성, 원칙 수립 .....	52
4. 잠재적 소다자협력 분야/대상국 정책 제안 .....	55
4.1 전통안보: 일반적 정책 방향 설정 - 북한 이슈를 중심으로 .....	55
4.2 전통/경성비전통안보: 협력 대상 중심 소다자협력 추진 구체 방안 제안 .....	59
4.2.1 소다자 전통 안보 협력: 방산협력 .....	59
4.2.2 소다자 전통 안보 협력: East Asian Nuclear Security Dialogue .....	61
4.2.3 소다자 전통 안보 협력: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Dialogue .....	63

4.2.4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해양 능력 배양(Maritime Capacity Building) · 64	64
4.2.5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마약, 밀수) ····· 65	65
4.2.6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 ····· 67	67
4.2.7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COVID-19) ····· 69	69
4.3 경제/연성비전통 안보: 협력 대상 중심 소다자협력 추진 구체 방안 제안 ····· 71	71
4.3.1 일반 경제 제 분야에서의 소다자협력 ····· 71	71
4.3.2 경제 분야 중 이민/이주 분야에서의 소다자협력 ····· 72	72
4.3.3 경제 분야별 소다자협력 대상국 선정 전략 제안 ····· 74	74
4.3.4 소다자 경제 협력: 회복탄력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체 구축 ····· 81	81
4.3.5 소다자 경제 협력: 이민거버넌스 ····· 83	83
4.3.6 소다자 경제 협력: 인프라구축을 위한 소다자 협력 ····· 84	84
4.3.7 소다자 경제 협력: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 86	86
4.4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소다자협력 추진 구체 방안 제안 ····· 89	89
4.4.1 (가칭) 한-아세안 우주개발/위성항법시스템 협력기구(ASEAN-Korea Space Development/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Cooperaton Organization) ····· 89	89
4.4.2 (가칭) 한-아세안 원자력개발협력기구(ASEAN-K Nuclear Energy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 ····· 90	90
4.4.3 대소다자협력 활성화의 기초 자산 형성 전략으로서의 아세안 유학생 대상 공공외교 활성화 및 다양화 ····· 93	93
4.4.4 슬루-슬라웨시해 연안 국가들과의 소다자협력 추진방안 ····· 94	94
V. 참고문헌 ····· 97	97

## 표 목차

<표1>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소다자협력 현황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14
<표2>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소다자협력 현황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18
<표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미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21
<표4>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미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23
<표5>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2008-2017 .....	24
<표6>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중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26
<표7>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중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28
<표8>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비미중-한국, 일본, 호주, EU, 인도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30
<표9>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33
<표10> 아세안 포함 주요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체 .....	34
<표11>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39
<표12>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40
<표13>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교관계 수립 연도 .....	56
<표14>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 설치 현황 .....	58
<표15> ASEAN + 아세안 10개국 FTA체결 현황 .....	74
<표16> ASEAN 1개국 + 아세안 10개국 포함 FTA협정 현황 .....	76
<표17> 아세안 10개국 BIT체결 현황 .....	78
<표18> 메콩 5개국 출신 인구의 국내 체류 동향(2014-2019) .....	80
<표19> ASCN 국가별 공급자 참여기관 .....	88
<표20>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아세안 유학생 통계 .....	93

## 그림 목차

<그림 1> 아세안 및 주요국가 FTA 네트워크 분석 .....	76
<그림 2> 아세안 및 주요국가 BIT 네트워크 분석 .....	80

## 요약문

현재 아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국제경제와 국제안보 레짐의 변화의 중심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경쟁임. 이러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의 강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 ‘새로운’ 지역 국가들과의 심화된 협력을 추진해야함. 미중 양대 강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등 중견국가들은 협력의 유용성·효과성 등을 고려, 양자뿐만 아니라 소다자(minilateral)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역내 질서 형성을 주도하고자 함. 우리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구상에 입각하여 역내 질서 형성 시도의 참여 및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소다자협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에 기반 한 강화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소다자 협력의 국제정치 및 국제정치경제를 학술적, 정책적으로 분석하여 그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효용성과 한계성을 검토함. 이에 근거하여 동남아시아를 중심,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들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양한 소다자협력 현황을 두 가지 기준, 즉 ‘종류’ ((1)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2) 경제/연성비전통안보)와 ‘주도/참여 국가’ ((1)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2)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중심; (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중심; (4)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미중 국가 중심; (5)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들 간)에 의거해 광범위하게 정리·분석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이 참여 및 관여하는 소다자협력의 적실성과 이에 기반 한 발전 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제안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신남방정책을 포함하여 동남아 지역 내외 중견국들과 하나 또는 복수의 전략적 소다자 연대 그룹을 형성하며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미중 간의 경쟁에서 야기되는 여러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의 필요성과 기초적인 방향도 제시함. 이러한 대동남아시아 외교 전략의 틀은 동남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소다자 추진 또는 기추진한 소다자협력 확대 또는 축소 방안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 대상 또는 잠재적 후보 지역인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프리카 등의 지역 소다자협력 구상 또한 추구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또한 한국 외교의 기존 전략 하 한국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들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들도 도전적으로 제시하여 4차 산업혁명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바이러스사태의 심대한 국제정치적 영향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창의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I. 서론

### 1. 연구 배경, 문제제기, 목적

#### [연구배경]

- 2020년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주요국들은 각자의 지역구상을 제시하면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음. 이제 근본적인 세계체제의 현상변경 원인으로서는 중국의 부상 및 전 방위적인 영향력 확장은 사실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정치경제적 발전으로 시작하여,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 및 정치력 강화하며 이를 통한 정치안보적 확장, 더 나아가 ‘중국모델(China Model)’로까지 불리는 가치의 수출 및 확장을 추진 중임.
-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세계체제 수준의 생태계에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작용. 또한 이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2012년 시진핑 집권 1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음. 중국공산당의 지배엘리트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동조하여 이를 단순히 일당 중심의 당국가체제의 생존만을 위한 전략으로 폄하할 수 없는 상황임. 이는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상징되는 민족주의와의 결합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의 기존 현상변경 역량에 희망적 사고가 팽배하게 만듦. 이와 같은 결합은 다른 모든 전략 선택지를 압도함.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반응 및 대응에 대한 전략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글로벌, 특히 아시아 지역적 (특히 동남아시아) 수준에서 대다수 국가들의 최소한의 부분적 경계 또는 적대적 시각과 대응에 직면함.
- 미국의 중국 부상 억제와 현상변경 복원력(resilience)에 대한 재평가가 대두됨.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강력한 중국 견제 또는 억제 정책들은 대다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음.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대응은 정치안보와 정치경제 양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군사적보다 정치경제적 방향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진행에 접근하고 있음. 나아가 가치 및 체제 경쟁의 의도 또한 파악하여 중국의 전방위적 ‘도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와 대응이 시작됨. 이의 핵심 테스트 베드가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아세안)임.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 변화는 2010년대 중반, 2017년 트럼프 집권 후 본격화되었으며 중국의 전방위적인 ‘일대일로’ 세계전략이 미국과 미국동맹(alliance)-지지(align

ment) 국가들의 중국에 의한 실제 현상변경과 현상변경 전망/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행동하게 한 임계치(threshold) 또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기능했음. 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만의 생각이 아니며 야당인 민주당 또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초당적(bipartisan)’인 국가 전략적 방향 전환임.

- o 중국의 현상 변경 능력에 대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양가적 대응들이 양국을 제외한 다른 주변국들에서 전반적으로 본격화되는 시기와의 일치함. 미중 간의 가속화 되고 있는 경쟁은 단순히 미중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수준의 전략으로 자리매김 한 ‘일대일로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첩지역인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수준의 행위자 모두의 문제임. 아시아 지역 수준의 행위자란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끼인 국가들 또는 중견국과 소국들 모두를 지칭하며, 가속화 되고 있는 미중 경쟁 및 갈등은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행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반대로 이들의 반응과 대응은 미국과 중국의 전 방위적 경쟁의 중단기적, 장기적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이에 국제정치의 분석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o 미국은 많은 현실주의-특히 공격적 현실주의-전문가들과 정책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현상변경에 대한 저항력(resistance)을 중국 부상 본격화된 2000년대와 2010년대 중반까지 사용하지 않음.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의한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현상변경이 명확히 가시화 된 후 자신의 전면적 복원력(resilience)을 사용하기 시작함.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공세 전환으로 인해 아시아 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각국들의 여러 양자, 다자, 소다자협력의 재평가와 동시에 새로운 국제 협력 플랫폼을 구성할 필요성 인식이 강화되는 상황임.
- o 미중관계의 전망은 쉽지 않지만 현재의 경쟁 과정을 거쳐 다시 협력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음. 현재의 양국 간 무역 및 기술 전쟁은 미국의 우위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양자 간의 수출입량의 차이에 기반. 그러나 중국의 다면적-종합적 비중이 커진, 즉 현상 변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세계체제가 다시 중국 부상 이전으로 복원될 수 없음. 미국의 복원력 사용과 동시에 현재(2020년)에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정치안보적 질서의 생태계에서 이탈하는 여러 현상들을 억제하고자 하는 저항력도 사용하기 시작함. 이 두 가지 다른 힘과 중국의 약화되고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현상변경력은 양국 간의 전면적 갈등-경쟁 상황 지속시킬 것임. 이로 인해 새로운 균형점(equilibrium)을 도출할 지 아니면 불안정성이 유지될 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

음. 세계체제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도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신남방정책과 지역 내 주요국,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일본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전략/구상,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네시아 주도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구상 등의 지역구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핵심적인 차이점은 신남방정책과 대다수의 주요국들의 대아세안 지역구상은 대상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에서 다소 상이한 것임. 미중일인호 등의 지역구상은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지역 전반을 아우르며 글로벌 수준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현재까지 아세안 각국과 인도와의 양자 관계 중심으로 지역구상을 전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지역구상 안에서의 양자, 소다자 측면에서 정치안보, 정치경제 분야의 개별적 협력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연구문제제기]

- 특히 현재 아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국제경제와 국제안보 레짐의 변화의 중심은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음. 아시아 전역에 걸친 중국의 정치경제적,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질서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인프라 건설 및 제반 산업, 기술 투자가 향후 중국의 직-간접적인 군사력 투사에 기여하게 될 것이 명백한 바, 역내에서 중국의 긍정적 영향 기대와 전략적 위협인식이 동시에 상승함.
-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들은 중국이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면서,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원조를 확대하는 것을 우려함. 일대일로의 규모와 범위가 미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가 제시하였던 지역 구상보다 훨씬 크며 이에 미국은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영향력과 힘의 투사가 아시아 전역에 걸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직면, 인도태평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이러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의 강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 ‘새로운’ 지역 국가들과의 심화된 협력을 추진해야함. 위의 중국과 미국의 두 전략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중단기적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의 장기적 시각에서도 아시아 전반의 질서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핵심 변인이 되기

때문임.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 또는 대상으로 위에서 제기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구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여타 국가 구상과의 관계 설정(연계·협력)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의 신남방정책,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만의 신남향정책 그리고 아세안 자체의 인도태평양 구상/비전 등의 다양한 지역구상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미중 양대 강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등 중견국가들은 협력의 유용성·효과성 등을 고려, 양자뿐만 아니라 소다자(minilateral)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역내 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관찰됨. 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Quad(미국·일본·인도·호주) 회의가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일본·호주·인도, 호주·인도네시아·인도, 태국·미얀마·인도·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들이 출범하여 역내 주요 사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 모색이 본격화 됨. 또한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소다자협력 전략 및 구체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구상에 입각하여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역내 평화와 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소다자 및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모색을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음. 역내 질서 형성 시도의 참여 및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소다자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이에, 동남아시아를 중심,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들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양한 소다자협력 현황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이 참여 및 관여하는 소다자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이는 2020년 현재 신남방정책의 초기적 성과에 근거하여 전략적 성격의 본격화에 따라 구체적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의 필요성이 강화된 수요에 부합함. 현재 이 방면으로 전략적/정책적 구상 및 로드맵, 현실적 외교수요 파악,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이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신남방정책을 포함하여 동남아 역내외 중견국들과 하나 또

는 복수의 전략적 소다자 연대 그룹을 형성하며 전략적 소통 및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미중 간의 경쟁에서 야기되는 여러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2.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 [연구방법]

- 학술 정책 문헌 연구
  - 국문, 영문, 중문 관련 학술 논문 수집
  - 주요국 싱크탱크, 컨설팅펌, 및 주요 미디어(미국, 중국, 일본, 한국, EU,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발간자료 수집
  - 동남아 역내외 국가들의 소다자 및 연관 전략, 정책 영역 관련 공식 성명, 입장문 등 비공식 발표 수집
- 질적, 양적 데이터 수집
  - 동남아 역내외 소다자 관련 현황
  - 여러 형태의 질적(스토리) 데이터 수집
  - 소다자협력 정치군사, 정치경제, 인적교류 등의 양적 데이터 수집
- 전문가 인터뷰
  - 전략연구 전문가 (각국 지역구상과 세계전략)
  - 동남아시아 및 연계 주요국 국제정치, 경제, 교류 전문가
  - 새로운 분야 (산림, 초국경대기이동, 초국경전염병 등) 전문가 및 정부 관료

### [연구결과 활용방안]

- 소다자주의의 장단점 또는 현실적 효용 및 한계 분석과 이에 근거한 한국의 외교 전략, 정책 수립을 재정비하는 학술적, 정책적 기초로 활용
- 주요국 협력 및 경쟁 동향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대상국들과의 다양한 소다자협력 방안 모색, 전략적 목표에 입각한 단계적 협력 추진 로드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동남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소다자 추진 또는 기추진한 소다자협력 확대 추진 방안을 기초로 신남방정책 대상 또는 잠재적 후보 지역인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아프리카 등의 지역 소다자협력 구상의 비교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 외교의 기존 전략 하 한국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들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도 추구하여 4차 산업혁명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바이러스사태의 심대한 국제정치적 영향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외교의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

## II. 소다자주의 국제정치의 학술적, 정책적 개념화 및 배경

### 1. 소다자주의

- 소다자주의(mini-multilateralism 또는 축약해서 minilateralism)는 “소수의 국가가 공통의 관심사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한 특정 이슈를 다루기 위해 비제도적 틀에서 연계되는 것”으로 정의됨(민병원 2018; 박재적 2018). 물론 소다자주의도 다자주의의 한 종류이며 여기서 소수란 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2개국을 초과하는 숫자를 의미하며 최소 단위로 3개국(trilateralism), 최대 10여 개국 정도를 관습적으로 의미함. 소위 이들 국가는 K(협력 시 비용이 협력을 통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협력에 동참하는 행위자 수)-Group으로 명명되거나(현실주의적 접근: Schelling 1978) 최소기여집단(자유주의적 접근: minimal contributing set; 적절한 국가들 간의 최적의 공공재 제공을 위한 비용 분담 논의 조직; Caporaso 1993)의 형성 주체로 취급됨.
- 소다자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구축 노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보편적 다자주의에 대한 대안 혹은 디딤돌(stepping stone)의 형태로 제안되기 시작함. 성공적인 다자간 협상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WTO 출범)이 마지막이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질서의 진전, 기후변화, 난민, 인권, 초국경적 환경문제 등 다자간협력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다자간 협력을 위한 대부분의 협상은 계속 실패 중임(WTO의 도하 개발 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가 대표적인 사례). 또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같이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국가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가 만연하기 시작함.
- 소다자주의는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대)다자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되기 시작함. 소다자주의는 “특정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소한의 국가들의 연합체”임(Naim 2009). 이러한 최소한 국가들의 숫자는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나 무역이나 기후 변화의 경우 약 20개국까지(예를 들어 G20)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 추측됨(Naim 2009). 이러한 소다자주의는 협의체에서 배제된 국가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보편적 다자주의의 정체상태를 해결하고 이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소다자주의는 양자주의(bilateralism)보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시적 기구와 차별되지만, 지속성과 높은 수준의 제도성은 약하며 유연성을 특성으로 ‘전략적 파트너

십'을 이뤄 국제전략에서 경계하는 연루 또는 방기의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임(Basrur and Kutty 2017). 제도주의나 기능주의 이론에서 논의되는 소다자주의는 일반화된 행동 원칙에 의거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달리 일정 정도의 제도성(institutionality)을 갖추지만 매우 공식적, 비탄력적은 아니며 이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와 결합한 유연성, 효과성에 기반하여 협력이 활성화되면 지속성을 갖춘 제도화로 진화할 수 있음. 소다자주의는 여러 형태로 형성, 발전하며 기존의 다자기구/제도의 틀 안에서, 또한 이러한 틀이 결여된 환경에서 특정 전략의 이슈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전략적 목적을 약화 또는 옹호를 위하여 도구적(instrumental)으로 형성됨.

- o 위의 소다자주의를 좀 더 국가 간 협력 체제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국제기구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다자 또는 양자의 틀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한 또는 부적합한 국가 간 이슈들을 소수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대응하는 과정”을 소다자주의로 정의함(Moret 2016, 2). 이 집합체는 다자주의 연합체 안에서 소다자주의가 발생할 때 주로 ‘클럽 동맹(club alliance)’의 성격을 지님(민병원 2018, 190). 기존 연구는 소다자주의의 기능과 역할을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함. 먼저 다자주의의 기능과 역할의 보완재 또는 대안으로 하는 두 가지 접근법은 다음과 같음.

- (1) 소다자주의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딜레마의 결점으로 지적되는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로 인해 다자협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도적 무력성을 극복하거나 양자주의의 제한된 확장성을 극복하기 위한 소수 국가들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연합체임(민병원 2018; Patrick 2015, 116). 글로벌 또는 지역 차원의 다자주의 협력이 지연, 교착, 무력화되거나 기존에 구축된 공식적이거나 정형적인 제도 밖에서 느슨한 형태의 협력 연합/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의사결정 및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성공 요인을 각각의 다자주의 내부에서 ‘동심국가(like-minded state)’가 여러 형태와 수준의 소다자 협의, 협력을 통해 두 다자주의 조직의 효율적 기능을 가능하게 한 것임(Green 2014, 759). 이와 유사한 예로는 ‘국제무역기구(WTO)’의 협력 지향 결정과 실행이 위의 집단행동의 딜레마 및 다른 국제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교착되었을 경우, 소수의 국가들이 양자 또는 소다자 자유무역협정(FTA)로 관세를 인하하여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인하 경쟁을 유도하여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강화한 것임.



(2) 소다자주의는 다자협력 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한 국가 간 이슈 영역에서 소수의 ‘동심국가(like-minded state)’가 동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 실험적, 자발적인 협력 기제임. 세계화로 인해 매우 복잡해진 이슈들(무역, 기후/환경, 사이버, 바이오, 해양, 우주, 산림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접근함.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비전통안보 이슈 영역들의 경우 기존의 다자협력 틀이 부재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다자협력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쓰임.

(3) 소다자주의를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위의 두 접근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지닌 지역 질서 형성을 위한 소수 국가들이 임시적(ad hoc) 세력규합 틀로 인식하는 접근도 있음(Green 2014, 964). 예를 들면 미국의 단극체제와 패권국 지위 약화에 대응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소다자협력기구, 즉 러시아·인도·중국삼자협력(RIC),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구축하여 미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 내 질서에 대항 또는 도전함(He 2018, 125-128). 이와 대구로서 2010년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세적, 확장적 군사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복수의 소다자 안보협력이 나타난 것을 중국을 억제 또는 봉쇄하기 위한 지역 내 안보네트워크 구축으로 볼 수 있음(Lee-Brown 2018, 168-170). 이러한 접근은 포괄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선행 단계로 보는 위의 두 접근법과는 상이함.

o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예를 들면 중국 또는 미국)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소다자협력을 확장한 뒤, 확장된 소다자협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임. 이는 특정 국가들의 협력 및 결합을 통해 지역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기존의 소다자 구조를 활용함. 예를 들면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간 소다자 협의(Korea, Indonesia, Australia: KIA)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기능했으며 2012년에 한국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사무국 유치에 KIA 소다자가 역할함(Watson 2015). 이를 확장하여 중진국 외교 맥락에서 멕시코와 터키까지 참여하는 확장된 소다자 그룹인 믹타(MIKTA)를 구성함. 아시아 지역 외 국가인 멕시코와 터키의 참여로 지역 포커스가 약화되면서 목적, 기능, 사업 동력이 약화됨. 이 맥락에서 다시 KIA로 소다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안보 및 경제적 세력 규합 및 확장을 위해 기존 소다자협력이 유사한 상황의 특정 국가들을 수용하기도 함. RIC이 BRICS로 확장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2017년에 SCO의 정회원국이 되며, 미일호인의 QUAD II가 QUAD Plus로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이러한 소다자주의는 공식적, 표면적으로 표방하는 목적, 즉 특정 전통, 비전통 안보 및 경제 안보 이슈

들에 대한 대응보다는 지역 내 힘의 균형 또는 우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확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면 인위적인 정당성 부여 또는 새로운 정책 영역을 추가함.

- o 소다자주의는 구성원들 사이에 필수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클럽 내 사회적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뢰(trust)를 형성, 발전, 확장시킴. 클럽은 대규모의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소규모의 공동체로 스스로의 의미(meaning) 체계도 생성하며, 이해관계와 동시에 공통의 '문화적 현상/정체성 형성'을 지향함; 구성주의적 접근도 가능.
- o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볼 때, 소다자주의를 궁극적으로 공유재(Common Pooled Resources)나 공공재(Public Goods)를 위한 다자협력체를 위한 초기, 중간단계로 보는 경향이 있음. 공유재나 공공재의 경우 비배재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무임승차의 문제에 기인한 집단행동의 딜레마(Dilemma of Collective Action)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재나 공공재의 공급이 국가들에게만 맡겨질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정부 등의 개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헤게모니의 주도, 혹은 리더십을 공동으로 발휘하는 소수(k 행위자)의 합의 등이 있음. 기후변화의 해결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소수의 유럽 국가 등이 기후변화라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소다자주의의 예시라 할 수 있음.
- o 공유재나 공공재 공급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소다자주의의 k는 리더십을 공동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소기여집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k 국가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공동으로 발휘하려는 국가는 제한적일 것임. 하지만, k국가의 리더십에 의해 공공재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이를 향유하는 국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다자주의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소다자주의는 (대)다자주의로 전환될 것. 즉, 소다자주의는 (대)다자주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함.
- o 이론적으로 덜 논의된 또 다른 소다자주의의 가능성은 클럽재(Club Goods)의 공급을 위한 소수 국가의 모임인 소다자주의임.<sup>1)</sup> 클럽재의 경우 배재성, 비경합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다수의 행위자가 자신들만이 영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공

1) 기존의 이론적 논의(Naim 2009, 민병원 2018 등)는 소다자주의를 개념화 하는데 있어서 클럽재 성격의 소다자주의와 공유재 성격의 소다자주의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사용함.

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 클럽재 성격의 소다자주의와 공유재 성격의 소다자주의를 개념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성격에 따라  $k$ , 즉 소다자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 클럽재의 경우 그 배재성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생길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가들만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클럽재 성격의 소다자주의는 조건적으로 참여국의 참여를 허락함으로써, 클럽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 o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학술적, 정책적 개념화 및 배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아래의 구체적 연구내용의 이론적 근거로 삼을 것임.

## 2. 소다자주의의 전략적 강점과 역할

- o 위의 두 가지 접근의 경우 소다자주의는 다자주의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음(Moret 2016, 2).
- (1) 비형식성이 야기한 ‘집단행동 딜레마’ 등으로 인해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방식의 해결이 어렵거나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유연한 대처에 유용함.
- (2) 특정 이슈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결합이므로 ‘비용분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다자주의보다 자유로움. ‘무임승차자’ 배제 가능.
- (3) 가치 및 이익을 공유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 소수 국가의 모임이므로 협의 과정을 단축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실행을 담보함.

## 3. 소다자주의의 전략적 약점과 한계

- o 위의 두 가지 접근의 경우 소다자주의는 다자주의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음(Patrick 2015, 117-130).
- (1) 비공식적 임시적인 소다자 틀에서 합의된 사항은 협의에 참여한 국가에도 구속력이 약하므로 참여국의 합의 미준수 또는 이를 통한 제3의 목적 달성 현상이 나올 수 있음.

- (2) 비공식적인 소수 국가들의 협의체로 상위 통제기구가 부재하여 참여국 간 ‘견제와 균형’이 어려움(Patrick 2015, 129)
- (3) 소다자협력은 참여하고 있는 소수 행위자만의 이익 또는 클럽이익(club goods)을 대변하여 다자주의 기반의 공공이익(public goods)을 약화시키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여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성(legitimacy)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Patrick 2015).
- (4) 초강대국의 소다자주의/협력에서의 부재 또는 거부(방해)가 있을 시 그 형성과 기능이 크게 제약됨. (소다자주의 확장에는 미국, 그리고 EU주요국들의 의지가 컸음) 이를 포럼쇼핑(forum shopping), 즉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행태로 지칭함. 많은 경우에 소다자협력은 강대국 중심의 전략적 선택인 경우가 많았음.
- (5) 또한 다양하고 중첩되는 제도가 존재할 경우,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를 골라 이용하는 포럼쇼핑의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제도를 공급하는 국가의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6) 이슈 해결 중심의 소다자주의/협력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복수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양국 관계가 안 좋을 경우 소다자협력 체제를 구성하기 어려움. 소다자주의는 대체적으로 협력 참여국들의 양자 관계의 양호 또는 증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일본-아세안 소다자협력은 쉽지 않으나 소다자 내 중재자의 존재로 극복될 여지는 있음.

o 소다자주의가 거둔 성과에 비해 그동안 소다자주의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공재 또는 클럽재(club good) 제공의 ‘비용’ 측면보다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측면에 더 주안점을 둬으로써 소다자주의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소다자주의가 단발성, 임시적(ad hoc) 성격의 소다자주의 협력이 되거나 참여 국가들의 일정한 목적 달성 또는 미달성 후 해체되더라도 여러 형태의 신뢰(Trust)와 정책 목표 적실성 및 효용성 여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결과물로 기능할 수 있음.

### III. 신남방정책 대상 동남아 국가 역내외 소다자협력 동향

#### 1.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소다자협력 구성 현황 분석

##### 1.1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1.1.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sup>2)</sup>

###### ① 말라카 해협 순찰(The Malacca Straits Patrol)(Ho 2004; Matthews 2015)

- [2004년 말라카 해협의 안보와 무역 경로를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의해 체결된 협약. 2008년에 태국이 정식 회원 가입]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중요해지며 해당 지역에서의 반테러리즘,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해양안보 이니셔티브(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RMSI)와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CAP)을 거절하고 역내 인도네시아만의 국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각각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에 3개국이 해협 순찰 협력 메커니즘을 구성함(Matthews 2015, 3-8). 2005년에는 태국이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고 2008년에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4개국으로 회원국이 증가함. 또한, 2011년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말라카 해협의 순찰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Eyes-in-the-Sky”(EiS)의 공중 순찰 방법과 Intelligence Exchange Group(IEG)의 정보교류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간 해적 퇴치와 해양 강도 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말라카해협의 소다자협력은 연관 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과 주권문제로 인해 제도의 구속력은 약한 수준에 속하나 정기적 합동 훈련 및 전투 작전 훈련을 실행하고 있음. 이들은 외부국가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주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조건이 없는 협력만을 허용하고 있음.

---

2) 전통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결부된 영토, 영공, 영해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적 협력이 필요한 이슈로서,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전통적인 군사동맹국 간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임. 경성비전통안보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국익(경제권, 지적 재산권, 인권, 치안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외교적 협력이 필요한 이슈로서, 테러리즘, 해적,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마약 유통과 인신매매 등을 막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해당 해역에서 안보적인 원조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임(김석수 2010, 54). 비록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역내 강국이 국내 상황과 주권침범에 대한 민감성을 이유로 표면적인 다자협력을 거부하였으나, 이들은 미국과의 양자협력과 원조, 훈련 등을 통해 안보자원을 획득하고 있음. 말라카해협이 안정되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 해병대의 주둔과 순찰 그리고 해협 주변국의 해상 순찰 강화와 예방 활동의 결과 때문임. 이외에도 미국은 이슬람 세력과 알카에다의 연계 그리고 이들을 저지,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국가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은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에 5척의 순찰함을 기증하기도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동남아 반테러센터에 재정과 전문가를 파견함. 또한, 말레이시아에 “Eyes-in-the-Sky” 등의 해양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163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② 술루-술라웨시해 순찰(Sulu-Sulawesi seas patrol)(Quilop 2020; Ikrami 2017)

○ [2016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은 술루-술라웨시해 지역에서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결정함]

2016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은 술루-술라웨시해 지역에서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해양순찰과 조난지원 그리고 정보교류, 공중순찰 등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싱가포르의 순찰 참여를 통해 정보제공을 시작하였음. 해당 해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말레이시아의 사바지역, 인도네시아의 동부, 그리고 필리핀의 남부지역과 같이 비교적으로 수도와 떨어져 있으며, 자본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재정과 안보역량, 제도화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함. 예를 들어 해양, 공중 순찰을 위한 공동협력 자원과 메커니즘이 부족하며 적절한 항해 체계를 위한 선박 역시 부족한 상황임.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세력의 부활징조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국가에서 이슬람세력 잔존 그리고 ISIS의 초국가적 활동 등으로 인해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표1>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소다자협력 현황(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말라카 해협 순찰 (The Malacca Straits Patrol)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경성비전통안보	말라카 해협의 안보와 무역 경로 수호를 위해 시행
술루-술라웨시해 순찰 (Sulu-Sulawesi Seas Patrol)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경성비전통안보	아세안 취약지대 중 하나인 술루-술라웨시해 지역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

### 1.1.2 경제/연성비전통안보<sup>3)</sup>

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성장 삼각지대(Indonesia-Malaysia-Singapore Growth Triangle: IMS-GT)(Shannon and Smith 1997; 우양호·김상구 2014)

- [인도네시아의 섬(Riau Islands - 리아우 제도: 바탐섬, 빈탐성 등), 말레이시아 연안 지역 정부(Johor Bahru), 싱가포르 간 대규모 경제협력을 위해 1994년 12월부터 시작]

IMS-GT는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준지역개발협력체계 중 최초의 성장삼각지대로 1989년 형성된 기존의 SIJORI(Singapore, Johor, the Riau Islands)가 확대된 형태로 이해 가능함. 해당 협력은 경제적 배후지를 만들려는 싱가포르의 주도로 인해 추동되었으며, 서로 각기 다른 접경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인구, 자원 기술, 자본 등의 상호 보완성을 이용·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음. 산업기술, 자본, 서비스 부분에서 앞선 싱가포르 정치권의 주도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노동력 및 토지자본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싱가포르는 해당 협력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로우 테크(low-tech) 산업을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아우(Riau)등에는 싱가포르의 하이테크 산업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짐. 해당 협력에서 싱가포르는 생산기획, 관리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조호르의 경우 반숙련 공업부품의 생산을 담당, 그리고 인도네시아 리아우의 경우 최저 단순노동을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담당하는 국가별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음. 해당 협력의 주요 외부 파트너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세안 사무국으로 아세안 연계성 하에서의 IMS-GT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IMS-GT는 각 국가의 정부의

3) 연성비전통안보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인류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류 공동체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로서, 인구와 이민 문제, 기후변화(climate change), 전지구적 전염병(global pandemic)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들 수 있음.

정치적 합의 이전부터 민간주도로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따라 자연스레 그 배경이 형성되었으며, 정부의 개입과 역할분담으로 시장의 힘과 정부제도화가 기존 SIJORI 협력에서 IMS-GT로 제도화됨을 통해 주변 지역의 노동인력과 자원을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잘 융합한 월경적 시장협력모델을 갖추었다 평가되고 있음(우양호·김상구 2014, 85-86).

②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 성장지대(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Christopher and Richter 2011; 현민 2019)

- [BIMP-EAGA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를 하나로 묶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블록으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천연자원과 필리핀의 노동력, 브루나이의 자금력을 결합, 기존의 아세안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저조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 촉진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시작되었음]

1992년 필리핀 대통령 피델 라모스에 의해 처음 구상된 해당 협력은 필리핀 남부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주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1994년 필리핀의 제안을 3국이 받아들이며 해당 협력이 성립되었음(현민 2019, 260). 약 1600만 제곱킬로미터의 지리적 면적과 약 7340만 명(2014년 기준)의 인구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BIMP-EAGA는 저발전 지역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해양부 동남아시아 지역을 섬들의 연계와 개발협력의 틀 속에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도네시아 동남지역(동티모르) 포함을 통해 지역적 응집력을 높이려 함(현민 2019, 257). 주요 협력분야는 농업산업, 어업, 관광, 에너지 및 운송분야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인프라 건설(관련국: 브루나이) 마나도-비통 연계(인도네시아), 라하드 다투 팜오일산업 단지(말레이시아) 민다나오섬 항구 확장 프로젝트(필리핀) 등이 있음. 1997-98년 금융위기와 엘니뇨 현상 등으로 정체되었던 협력체계는 2001년 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2년 8차 BIMP-EAGA 정상회담을 통해 2006-2010 로드맵과 행동계획이 채택됨. 해당 행동계획은 아세안연계마스터플랜과 보조를 맞추어 교통, 에너지, 무역증진, ICT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도적 기제의 강화를 증대하고자 함. 4개국 정부와 민간부문 중심적의 조직구조로 이루어져 아직까지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BIMP-EAGA 내부에서도 중앙·지방정부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음.

③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 삼각지대(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CLV-DTA)(Chheang 2018)



- [1999년부터 시작된 메콩강 유역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들의 소다자경제협력으로 초국경 무역, 투자, 그리고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역적 통합을 이루고 개발과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1999년 발족 당시 각 국가의 특정 지역 10곳에 대한 경제, 정치적 협력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아세안 지역 간의 불균형한 개발 및 성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 베트남은 해당 협력에서 가장 큰 경제력과 사이즈를 보유하는 국가로 사실상의 리더(de facto leader)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역 간 경제협력 및 통합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향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또한 확인하고자 함. 해당 협력은 연 2회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경제협력을 넘어 (1) 정치, (2) 안보, (3) 사회와 문화 이슈 및 발전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분야는 인프라 개발, 국가 및 지역 간 연결성 증진, 무역 및 투자 촉진, 인적 자원 개발이 있음. 일본은 2004년 CLV-DTA 국가에 15억 달러의 원조제공을 약속하며 해당 협력의 주요 외부파트너로 활동함. 주요 국제기구 파트너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있으며 CLV-DTA국가에 5-point 개발 전략 제시를 통해 외부자문의 역할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세 국가의 메콩강 수자원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이견과 국경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소다자협력을 저해할 요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④ 아예야와디-차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Prachason 2008; 김태운 외 2011)

- [태국이 주도하는 메콩개발사업(ACMECS)으로 농업, 인프라, 관광 등 역내 국가간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2003년에 시작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소다자협력 프로젝트]

ACMECS는 지역경제 발전과 개발격차 축소, 경제통합 달성 추구의 ASEAN 경제공동체 구상 계획의 보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태국의 주도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제발전 가속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김태운 외 2011, 31). 주요 협력분야는 무역 및 투자 촉진, 농업협력, 산업 및 에너지 협력, 수송망 연결, 관광협력, 인적자원 개발, 공중위생 및 환경분야 협력이며 2년에 한 차례 장관급 정상회담이 매년 개최되고 있음(김태운 외 2011, 32). 비회원국 정부, 지역 및 국제기구 등 개발 파트너의 경우 ACMECS가 정한 규율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11년 10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향후 한국이 메콩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의 선언을 발표하였음.

<표2>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 및 소다자협력 현황(경제/연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성장 삼각지대 (Indonesia-Malaysia-Singapore Growth Triangl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경제	리아우 제도, 조호르바루, 싱가포르 간 대규모 경제협력을 위한 협력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 성장지대 (Brunei-Indonesia-Malaysia-Phil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경제	동남아 지역의 경제블록으로 기존의 아세안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저조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설립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 삼각지대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경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소다자 경제 협력, 지역적 통합과 빈곤 퇴치 목표
아예야와디-차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경제	태국 주도의 메콩개발사업으로 산업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

## 1.2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미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1.2.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① 아세안-미국 해상훈련(ASEAN-United States Maritime Exercise: AUMX)(Kapur 2019)

○ [2019년 아세안 10국 전체와 미국 사이에서 실시된 군사훈련]

2019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 수행된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미국의 첫 해상군사훈련임. 작년(2019년)에 시작되어 현재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세안 10국 전체와 미국이 실시한 첫 번째 군사훈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② 코브라 골드(Cobra Gold)(Stars and Stripes 2019/2/13)

- [1982년부터 미 태평양사령부(現,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군 주도로 매년 개최되는 군사훈련]

태국과 미국의 양자 군사훈련으로 시작하였으나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는 7개의 참가국과 10개의 옵저버(캄보디아, 이스라엘, 라오스, 브루나이, 파키스탄, 스웨덴, 독일, 스리랑카, 브라질, 베트남)로 이뤄지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확대되었음. 한국은 2010년부터 해병대가 정례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 가장 최근의 훈련은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됨. 해당 훈련에는 전 세계 27개국이 참가하였음. 훈련은 지역 내 참여국들 간의 관계 구축,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상호 운용성의 개선, 해상 안보의 강화, 신흥 질병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예방 및 완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함.

③ 코프 타이거(Cope Tiger)(정구연 2020, 43)

- [미태평양 공군의 주도하에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및 미국 사이의 3개국 연합군사훈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참여 국가들의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 태세와 상호 유기적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임. 2019년 3월에 실시한 훈련에서는 1150명에 가까운 공군 병력이 참가하였으며, 76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음. 미국은 F-16 팔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을 파견함(Pacific Air Forces 2019/3/11).

④ 캐럿(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CARAT)(Johnson 2019)

- [미태평양 함대의 주도하에 1995년부터 아세안 회원국들과 매년 실시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및 태국의 해군이 참가하였으며,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는 2010년부터 참가함.

⑤ 씨캣(Southeast Asia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SEACAT)(USINDOPACOM 2020/7/21)

-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미국과 아세안 그리고 역외 국가들이 참가하는 훈련]

미국은 반테러리즘 협력을 위해 씨캣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해당 훈련의 목표는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집결시켜 정보 공유 및 다자간 조정의 가치를 강조하여 동 지역의 해상 안보를 강화하는 것에 있음. 올해 훈련은 7월 21일-23일 22개국(한국 포함)이 참가하는 가운데 가상 심포지엄으로 실시됨.

⑥ 발리 카탄 훈련(Balikatan)(Parameswaran 2019)

- [1991년 이래 미국과 필리핀 양국 사이에 실시되고 있는 연례군사훈련]  
해당 훈련은 1991-95년까지 지속되다가 잠시 중단되었음. 이후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2014년부터 필리핀과 방문군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을 맺은 호주가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음.

⑦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AAP)(Limaye and Kikuchi 2016)

- [2006년 아시아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와 강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력]  
2006년 일본의 주도로 20개의 회원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아시아 해적퇴치협정이 맺음. 본 협정은 연례 회의와 보고서를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해적 활동의 억제 및 근절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참여국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사법적 통제를 집행해줄 능력을 기르고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를 강화하고자 함. 해적 행위와 테러리즘, 밀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등의 사안은 미일 양국이 동남아 지역에 관여하기 위한 중점 이슈이며, 해양 안전에 대한 영향력과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본 협정은 남중국해에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적극성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아세안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지역 해양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특이 사항으로 평가됨.

⑧ 바이오 안보를 위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 다자대화체제(U.S.-Singapore-Malaysia-Indonesia Multilateral Dialogue on Biosecurity)(Cicero et al. 2019)

-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이 국제적인 바이오 안보 위협을 조기에 탐색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 대화를 구성]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초국경 운항이 대량으로 넘나들며, 인간과 동물 간의 지역과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바이오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특히 취약함. 사스(SAR

S), H5N1,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는 이러한 예시에 속하며 이에 따라 바이오 과학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질병과 바이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4개국은 필수적인 공공건강의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적인 바이오 안보 위협을 조기에 탐색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 대화를 구성함. 본 대화체제는 2014년 존스홉킨스 보건안전센터(The Johns Hopkins Center for Health Security)에 의해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을 참여국으로 처음 수립되었으며, 이후 2015, 2017, 2019년에 개최되며 태국과 필리핀이 이 대화체제에 참여하였음. 본 협정은 비장관 수준(nonministerial level)의 대화체제로, 주요 대화 참여자는 고위급 전·현직 정부 관료와 비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트랙2 수준에서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관점과 취약점, 새로운 아이디어, 이슈 등을 제약 없이 제시하는 것이 가능함. 다수의 국가, 비국가기관에서 온 참여자들은 동남아에서 바이오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찾아내고 완화하기 위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함. 본 대화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다자간의 공동 훈련 프로그램과 미래 바이오 안보 위협에 대한 펀드의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표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미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아세안-미국 해상훈련 (AUMX)	아세안(10) 미국	전통안보	2019년 시행된 미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가 모두가 참가한 군사훈련
코브라 골드 (Cobra Gold)	태국 미국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참관국(10)	전통안보	미 태평양 사령부 주도하에 198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이후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들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확대발전됨
코프 타이거 (Cope Tiger)	태국 싱가폴 미국	전통안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주도하에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미국 3개국의 연합군사훈련
캐럿 (CARAT)	아세안(9) 미국	전통안보	미 태평양 함대 주도하에 199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연합군사훈련

씨캣 (SEACAT)	아세안 미국	경성비전통안보 / 전통안보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주도하에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아 세안 지역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을 모색
발리 카탄 훈련 (Balikatan)	미국 필리핀 (호주)	전통안보	199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미 국과 필리핀 양국 연합군사훈련
아시아 해적퇴치협정 (ReCAAP)	아세안(10) 일본 미국 한국 호주 영국 등	경성비전통안보 / 전통안보	2006년 아시아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와 강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주도로 체결된 정보공 유협정
바이오 안보를 위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간 다자대화체제 U.S.-Singapore-Ma laysia-Indonesia Multilateral Dialogue on Biosecurity	미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경성비전통안보 / 연성비전통안보	다자대화체제 회원국 4개국이 국제 적인 바이오 안보 위협을 조기에 탐 색,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1.2.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① 메콩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LMI)(Chang 2013)

-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동남아를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던 논의로 메콩강 하류지역의 국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 협력체 구성 프로젝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지정학적 관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진행된 프로젝트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짐. 2009년 당시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만 참여하였으나 2012년부터 미얀마가 포함되었으며,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의 주관 하에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하고 분야별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였음. 주요 협력분야는 수질 및 환경, 보건, 농업, 커뮤니케이션, 교육, 에너지안보

가 있으며, 주요 사업의 경우 미국 측에서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이전, 그리고 양자개발 원조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이 있음. 2009년부터 매년 정례 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외부파트너국가 선정을 통해 주기적으로 다른 국가의 참여를 유도 (호주, 뉴질랜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한국)하고 있음. 한국은 이미 LMI 파트너 국가로 한국과 미국은 함께 메콩강 유역 국가 정부 관리들에게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수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음.

<표4>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미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경제/연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메콩하류 이니셔티브 (Lower Mekong Initiative)	미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경제	메콩강 하류지역의 국가 대상의 지역 협력체 구성 프로젝트

### 1.3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중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1.3.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① 아세안-중국 해상훈련(ASEAN-China Maritime Exercise)(Parameswaran 2018)

##### ○ [2018년 10월 아세안과 중국 사이에서 실시된 해상군사훈련]

2018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둥성 해안에서 훈련이 시행됨. 애초 계획은 아세안 전체가 참가하는 훈련이었으나 5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만이 선택을 파견함.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은 옵저버로 참가했음. 해당 훈련은 아직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세안과 중국의 군사협력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됨. 이 훈련이 아세안-미국 해상훈련(AUMX)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과 아세안 전체 회원국들의 군사협력은 2018년 10월의 아세안-중국 해상훈련(ASEAN-China Maritime Exercise)에 그침. 개별적 양자 군사협력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집중되고 있음.

<표5>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2008-2017

파트너 국가	연도	훈련명
태국	2008	Strike 2008
	2010	Blue Strike 2010
	2010	Strike 2010
	2011	Unnamed
	2012	Blue Strike 2012
	2013	Strike 2013
	2014	AHex
	2014	Cobra Gold 2014
	2015	Cobra Gold 2015
	2016	Blue Strike 2016
	2017	Falcon Strike 2016
	2017	Cobra Gold 2017
싱가포르	2009	Cooperation 2009
	2010	Cooperation 2010
	2010	Unnamed
	2014	Cooperation 2014
	2015	Maritime Cooperation 2015
인도네시아	2011	Sharp Knife 2011
	2012	Sharp Knife 2012
	2014	Komodo 2014
	2014	Sharp Knife 2014
	2015	IMDEX Asia
	2016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
	2016	Komodo 2016
말레이시아	2014	Peace and Friendship 2014

출처: (정구연 2020, 45)

② 란창-메콩유역 법률집행 안보협력 협의(The signatory countries of the 199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Drug Control (MOU), China-Laos-Myanmar-Thailand and Meeting on Law Enforcement Security Cooperation along the Mekong River)(李春 2019; 新华网 2011/11/1)

- [1993년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의 4개 국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접촉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역에서의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체결된 MOU, 메콩강 유역 국가 간 체결된 사법 집행 안전협력 성명]

란창-메콩 지역 협력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란창-메콩 유역을 따라 초국가적인 밀수, 인신매매, 자금세탁, 해적, 마약 등의 불법 행위가 다수 일어나는 지역으로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항상 강조되어 왔음(中新网 2011/10/31). 본 MOU는 중국과 란창-메콩 지역



동남아 국가 간의 반마약, 반자금세탁의 소다자협력 제도이며, 이후 범죄 통제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함. 예를 들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는 공동으로 메콩강 지역의 인신매매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8개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위조화폐나 사기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함. 또한 2년 마다 고위급 혹은 부장급 회의를 열어 MOU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 등을 실시함.

- 현재 캄보디아,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과도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2011년 10월 5일 메콩강 살인사건 이후 China-Laos-Myanmar-Thailand Meeting on Law Enforcement Security Cooperation along the Mekong River의 연합성명이 체결되어 각국 간의 정보교류 강화와 협력순찰, 치안 문제의 처리, 다국적 범죄 등의 내용이 강조되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명국 간의 순찰이 진행되고 있음. 본 회의에서는 정보와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양자 협정을 통해 협력의 장기화와 제도화를 도모. 그러나 해당 소다자 메커니즘은 상호 간 명확한 의무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협약의 권위가 부족하고, 국가 이익과 주권문제에 있어 제한을 받아 협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③ 중국-아세안 검사장 회의(The China-ASEAN Prosecutors-General Conference)(李春 2019).

- [2004년 7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국제형사사법협력을 위해 시작한 협력 메커니즘] 2003년 중국이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고 동남아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이후 다국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위해 본 협력 메커니즘이 설립됨. 동남아와 홍콩, 마카오 등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테러리즘, 부패, 사기, 마약, 밀수 등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04년 제1회 검사장 회의로 시작하여 매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제12회 검사장 회의를 함.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해당 메커니즘 안에서 양자, 소다자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현재 중국은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6개국과 각각 형사사법협력조약을 맺고 있으며,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등 4개 국가와 인도조약을 맺고 있음. 중국은 본 메커니즘을 통해 일대일로 정책의 복합적인 정치적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발전과 법률제도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④ 기타: 중국과 아세안 연안 국가와의 협력

- 중국 역시 많은 양의 무역물자와 석유, 에너지자원이 말라카해협을 지나가고 있는 상

황. 이에 말라카해협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의 다수 중견국 그리고 역외 국가인 미국, 일본 등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이는 중국이 언급한 ‘말라카 딜레마’로 대표되며,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재정적 지원 확대와 원조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라카해협의 관련 국가들이 설립한 항로표지기금(Aids to Navigation Fund)을 지원하고 말라카해협의 위험, 위해 물질 대응센터를 위한 구축지원에 힘을 쓰고 있으며, 관련 국가들의 주권 보장을 약속하며 말라카해협의 안보지원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함.

<표6>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중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아세안-중국 해상훈련 (ASEAN-China Maritime Exercise)	아세안(10) 중국	전통안보	2018년부터 중국과 아세안 10 개국 간 실시된 해상훈련. CUES, 구조 작전, 소통 훈련 등을 실시
란창-메콩유역 법률집행 안보협력 협의 (China-Laos-Myanmar-Thailand Meeting on Law Enforcement Security Cooperation along the Mekong River)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경성비전통안보	란창-메콩 유역 연관 국가 간 인신매매, 밀수, 마약, 해적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체결된 협력
중국-아세안 검사장 회의 (The China-ASEAN Prosecutors-General Conference)	중국 아세안(10)	경성비전통안보	테러리즘, 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협력 협의체

### 1.3.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①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 [동남아지역 본토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원조와 함께 설립된 소다자협력으로 국가간 경제관계를 강화시키고자 설계된 소-지역(sub-regional) 메커니즘]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메콩강 인근 유역의 국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와 함께 공동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한 개발 프로그램으로 공동체(Community), 경쟁력(Competiveness), 연계성(Connectivity)의 3C라는 구호 아래 물리적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물리적 연계성에 대한 합의가 법적·제도적으로 논란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접경’의 문제를 ‘기술적’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Biba 2018). GMS를 포함한 메콩강유역의 지역개발협력사업의 주요 특징의 경우 메콩유역 개발에 있어 아세안회원국이 아닌 역외국가들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배경에는 개발재원 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음.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아세안은 메콩강유역개발에 있어 초국가적이며 다자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며 동일한 이유로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선호함(Soong 2016). GMS는 인프라 발전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아래로부터 위(Bottom-Up)의 개발전략 강조를 기반으로 지역개발협력을 촉진하고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제도적 역량의 강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역외 개발파트너국가들과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임. 해당 협력은 ADB에 의해 지속적으로 GMS 협력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으며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관광, 인적자원개발, 무역활성화, 투자 및 농업 개발 등 포함되어 있음.

## ② Lancang-Mekong Cooperation (LMC)(Middleton and Jeremy 2016)

- [2012년 태국이 국에게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중국이 2014년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란창-메콩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시작된 지역 소다자주의 협력사업]

해당 협력의 참여국가는 중국,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3+5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있음 (3: 정치안보, 사회문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5: 농업 및 빈곤퇴치, 수자원, 생산력, 경제협력, 커뮤니케이션). 2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 및 주기적 외교장관 정례회의를 통해 소다자주의 협력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메콩유역 인프라 조성 및 투자사업과 댐 건설을 통한 수력자원 개발, 그리고 경제개발특별지구 조성 및 초국경 경제권 형성 등이 있음. 해당 협력은 중국의 주도적인 제안이 아닌 태국이 제안으로 중국이 화답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중국과 메콩유역 국가간의 양자협력으로 이루어짐(The ASEAN Post 2019/4/3).

<표7>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중국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경제/연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메콩경제권 (Greater Mekong Subregion)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경제	동남아시아 본토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 그리고 재정적 원조로 설립, 국가간 경제관계 강화 목표
란창-메콩 협력 (Lancang-Mekong Cooperation)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경제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에 대한 태국 주도의 지속가능 개발협력 사업

#### 1.4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비미중-한국, 일본, 호주, EU, 인도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1.4.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① 밀란(Milan) 국제 해상 군사훈련(Upadhyaya 2016, 39-45)

###### ○ [1995년에 개최된 인도 주도의 국제 해상 군사훈련]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그리고 태국 등 동남아, 남아시아국가만 참여하였지만 이후 태국,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케냐, 오만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훈련으로 확장되었으며 2년에 한 번씩 개최됨. 본 훈련은 인도지원과 재난구조 그리고 정보교류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IONS) 등과의 역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함께 참여국 간 세미나, 사회 이벤트, 스포츠 경기 등을 함께 진행함. 가장 최근 훈련은 2019년 11월 비사카파트남에서 개최됨. 인도 주도의 군사훈련인 밀란(Milan)은 인도태평양과 동남아 역내에서 커지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② 5개국 방위협정(The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 FPDA)(李兴刚 2018)

- [FPDA는 1971년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의 5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음]

FPDA는 회원국 자신들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1년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의 5개국에 의해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안보 협상 메커니즘으로 시작됨.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였던 곳에 군사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였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뉴질랜드와 호주는 동남아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안보적 요구가 존재하였음. 초기에는 협약은 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훈련과 원조를 통해 군사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또한 회원국 간의 상호 신뢰를 건설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국가의 국내 안정으로 인해 협약의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존재함.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FDPA는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과 군사훈련, 해양안보 그리고 영국이라는 강대 우방국의 존재 등의 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는 평가 역시 있으며, 실제로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의 실종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호주가 동남아 역내에서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음.

### ③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Indian Ocean Naval Symposium: IONS)((Upadhyaya 2016, 39-45)

- [2008년에 해양 협력을 위한 역내 포럼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 해군의 주도하에 설립]  
IONS는 2008년 인도양 해양국가들의 해양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도 해군의 주도하에 24개국이 모여 창설됨. 이외에도 8개의 옵저버 국가들이 존재함. 초기 세미나는 2008년 인도 해군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이후 Conclave of Chiefs의 정기 회의와 세미나는 2년에 한 번씩 개최 됨. 또한, 사무국과 의장이 존재함. 설립 초기 IONS는 다자안보포럼으로써 성공적으로 인도양의 해양 국가들을 역내조직의 모습으로 탄생시켰다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다자기구들이 등장하면서 ‘talk shop’ 포럼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박 산업과의 연계와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 ④ 일본과 아세안 연안국가와의 협력(김석수 2010, 51-53)

- [1969년에 설립된 일본과 말라카 연안 국가들의 협력]  
일본은 재정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1981년부터 일본은 말라카해협에서 석유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회전기금 설립에 4억 엔을 지원하였으며, 말라카해협의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국제교류기

금(Japan Foundation)의 지원을 통해 1969년에 말라카해협위원회를 설립함. 또한, 말라카해협에서의 반테러리즘 협력과 안보 강화의 협력을 위해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일본해안경비대는 초계정과 초계기를 통해 관련 국가들의 해안경비기관들과 합동 훈련을 수행하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본해양경비학교에 해외유학생을 받아들이며 전문가 회의를 위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함. 이외에도 일본은 2005년 인도네시아와의 합동 대규모 해적 소탕훈련을 수행하였고 싱가포르 주변 공해에서 미국 등 17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표8>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외 국가 (비미중-한국, 일본, 호주, EU, 인도 중심)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밀란 국제 해상 군사훈련 (Milan)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케냐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7개국	전통안보/ 경성비전통안 보	1995년 인도 해군에 의해 초청된 국가들 간의 해상 군사훈련
5개국 방위협정 (FPDA)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영국	전통안보	1971년 5개국 간의 안보협력 협상 메커니즘으로 시작하여 협력을 통한 안전 보장, 훈련, 원조를 통한 군사능력 발전이 목적인 협정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 (IONS)	동남아(6) 동아프리카(6) 서아시아(4) 남아시아(6) 호주 프랑스	전통안보	2008년 인도양 해양국가들 간의 해양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인도 해군의 주도 하 시작된 훈련.

#### 1.4.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① 메콩-강가 협력(Mekong-Ganga Cooperation: MGC)(Chheang 2019)

- [메콩강 지역의 국가들의 관광,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통 분야 협력을 위해 인도의 주도로 2000년부터 시작한 소다자주의 협력 프레임워크]

MGC 소다자협력의 주요 협력분야는 관광, 문화, 교육, 교통으로 각 분야에 대한 워킹 그룹을 한 국가씩 의장을 담당하고 있음. 행동 계획수립은 인도가 맡음으로써 전체적인 협력계획 수립 및 예산 진행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인도가 담당함. 연례 MGC 장관회의를 ASEAN 장관회의와 더불어 진행하였으나 2012-2016년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도와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Transnational Highway 사업과 MGC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의 ITEC 장학금 사업이 있음.

② 일본-메콩 협력(Japan-Mekong Cooperation: JMC)(이요한 2015)

- [일본의 주도로 일본과 메콩 지역 파트너십(Japan-Mekong Regional Partnership)으로 처음 시작해서 2008년부터 제도화된 일본과 메콩강 유역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간의 소다자협력 사업]

2008년 처음 도쿄에서 JMC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청년교류, 관광 분야에서의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2008년부터 연례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는 2009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협력분야로는 정치 및 지역 안정, 경제 활성화, 교육, 관광 및 인프라 조성이 있음. 공공 분야를 넘어 민간 업체 간의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2015년에는 신도쿄 전략(New Tokyo Strategy 2015)의 일환으로 메콩강 유역 5개국에 74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음. 이는 2016년 아베 총리가 발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FIOP)”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에 있어 인도-태평양지역의 개념은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르는 것임을 시사하며 이들 지역을 하나로 묶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층 강화해 나갈 방침을 언급하였음. JMC는 이러한 일본의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나가고 있는 소다자주의 협력 사업임. ASEAN국가 간의 불균형적 성장을 명시함으로써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에게 다자간 그리고 양자 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③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 기구(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김도연·한형민 2018)

- [BIMSTEC은 동서남아 7개 국가로 구성된 지역 기구로 1997년 상호 기술 교류 및 경

제협력을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회원국으로는 인도, 미얀마,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가 있음]

BIMSTEC은 남아시아 지역 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 기인하며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주변국우선정책의 일환으로 BIMSTEC에서의 인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해당 기구는 분야 기반(sector-driven)의 협력 조직으로 현재 총 14개의 협력 분야가 있으며, 분야별 담당 국가가 지정되어 있음 (방글라데시: 무역, 투자 / 인도: 교통 및 통신, 관광, 대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 환경 및 재해관리 / 미얀마: 에너지, 농업 / 스리랑카: 기술 / 태국: 어업, 공공보건, 인적교류 / 네팔: 빈곤완화 / 부탄: 문화협력). BIMSTEC의 역내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범 당시 29억 달러였던 무역 규모는 2015년 기준 3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약 12배 증가함. BIMSTEC은 풍부한 노동인력과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 규모 차이, 열악한 인프라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 동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최근 인도 모디정부가 BIMSTEC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BIMSTEC 회원국들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④ 한-메콩 협력(Mekong-ROK Cooperation: MKC)(ASEAN-Korea Center 2017)

○ [MKC는 2011년 한-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메콩’외교장관회의를 신설하면서 제도화된 한국 및 메콩 5개국의 소다자협력사업]

MKC는 한-메콩 6개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프라, ICT, 환경/산림, 수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주요 사업은 메콩교통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통상 및 물류분야 인적역량 강화사업,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등임. 한국은 1990년대 이래 메콩지역에 총 25억불 규모의 ODA를 지원해왔으며, ASEAN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메콩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ASEAN 통합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2010년 하노이 한-ASEAN 정상회의 때 한국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을 제시하였음. 외교장관 연례회의 (연 1회)로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 시 back-to-back으로 개최하되 3년마다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부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및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한 7대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청와대 2019/11/27)하며 2023년까지 한국 ODA 기금의 20%를 메콩강 5개국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함.



<표9>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경제/연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메콩-강가 협력 (Mekong-Ganga Cooperation)	인도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경제	메콩강 지역의 국가들의 관광,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통 분야 협력을 위한 인도 주도의 프레임워크
일본-메콩 협력 (Japan-Mekong Cooperation)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경제/ 연성비전통 안보	일본 주도의 메콩 지역 파트너쉽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 기구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인도 미얀마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경제	동서남아 구성의 지역기구로 상호기술 교류 및 경제협력을 위한 조직
한국-메콩 협력 (Mekong-ROK Cooperation)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경제	한국 주도의 인프라, ICT, 환경/산림, 수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소다자협력 사업

⑤ 동남아시아 국가 포함 국제이주 중심의 지역협력체(이병하 2019)

- 지역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RCPs)는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 간 정보 공유 및 지역 내 이주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국제이주 분야 중요한 다자주의적 협력 기제임(이병하 2019, 25). 아시아 지역은 국제이주 분야에서 지역협력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2007년 ‘이주근로자의 권리보호

와 증진에 대한 아세안 선언’ 이후 국제이주 관련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위 간료들 간의 정기적 회의 개최 등 아세안 내 지역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 세계 주요 지역협의체 중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협의체는 아래와 같음.

<표10> 아세안 포함 주요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콜롬보 프로세스 (Colombo Process)	아세안(5) 외 7개국	연성비전통안보	아시아 출신의 해외 고용 및 계약직 노동자 관리에 대한 대화와 협력 촉진을 위한 회원국 주도의 비공식 포럼.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형성됨.
아부다비 대화체 (Abu Dhabi Dialogue)	콜롬보프로세스(12) 외 6개국과 말레이시아	연성비전통안보	아시아 국가 간 안전하고 정연한 이주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2008년 설립됨.
난민, 실향 그리고 이주민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정부간 협의 (APC)	아세안(10) 외 24개국	연성비전통안보	이민자를 넘어 난민과 실향자 등 다양한 인구이동을 포함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1996년 설립됨.
발리 프로세스 (Bali Process)	아세안(10) 외 35개국	연성비전통안보	2002년을 기점으로 인신매매 및 밀수 등 초 국가 범죄 관련 지역 인식의 향상과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음. 정책적인 대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실질적 협력을 목표한 포럼임.

(1) 콜롬보 프로세스(Colombo Process: CP)(이병하 2019)

- CP는 2003년 설립된 회원국 주도의 비공식 포럼으로 2008년 유럽연합의 지원 하 ‘아시아-유럽 대화체’로 출범을 통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간 노동 이주 관련 견해를 교환하며 지역 간 협의체(trans-regionalism)이라는 특유한 위상을 확보하였음(이병하 2019, 31). 가입국은 총 12국으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이 있음. 해당 협력은 아시아 이민 송출국의 해외취업 및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해외 기간제 계약 노동자와 노동 이민의 이익을 최적화하고 착취로부터 보호하고자 역량 형성 및 데이터 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음. 지속적인 참여국은 아니나 해당 협력체에 중국이 참여한 바 있으며, 2005년 한국이 옵저버 국가로 참여한 적 있음.

(2) 아부다비 대화체(Abu Dhabi Dialogue: ADD)

- 2008년 설립된 협력체로 아시안 국가들 간 계약 노동의 매 단계 책임성 규정, 프로젝트 설정, 기간제 계약 노동자를 위한 지역 내 다자적 프레임워크 구축하고자 함. 총 회원국은 19국으로 CP의 모든 12개의 회원국인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과 6개의 걸프국가들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포함하고 있음.

(3) 난민, 실향민 그리고 이주민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정부간 협의(Intergovernmental Asia-Pacific Consultations on Refugees, Displaced Persons and Migrants: APC)

- 1996년 설립되었으며, 난민, 실향민, 이민자 등을 포함한 인구 이동과 관련된 이슈 논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로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칼레도니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바누아투, 베트남, 홍콩, 마카오와 같이 총 34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4)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 비합법 이주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인신매매 관련 지역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45개국(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북한, 피지, 프랑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키리바시, 라오스, 마카우,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리아,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대한민국,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동티모르, 통가, 터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미국, 바누아투, 베트남)과 더불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글로벌 연합 또한 가입되어 있음. 해당 연합의 제도화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2009년 이후 매 2년마다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은 물론 국제이주기구와 유엔난민기구로 구성된 조정 그룹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후속 회의를 결정하며 일관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효과적인 지역적 대응 방안을 모색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이병하 2019, 31).

(5) 아시아 태평양 이민 연구 네트워크(The Asia Pacific Migration Research Network: APMRN)(이병하 2019, 32)

- 아시아 태평양 이민 연구 네트워크는 1995년 저명한 이민 연구자인 스티븐 캐슬스(Stephen Castles) 교수의 주도 하 설립되었으며,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2003년 사이한국, 일본, 중국, 대만 (비공식멤버),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7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였음. 해당 네트워크는 상기에서 설명된 지엽협력체들 외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이주분야 인식공동체로 아시아 지역 내 참여 국가별로 연구자 조직/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국제이주 현상을 다학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하며, 국제이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축적함을 통해 이민정책 형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향후 APMRN은 한국이민학회로 이어지는 ‘한국 이민 연구 네트워크(Korea Migration Research Network: KMRN)’의 모티브로 구성되었음.

## 1.5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

### 1.5.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① 4자 전략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Paik and Park 2020; 백우

열 외 2019; 최재덕 2019; 서승원 2020; 이기태 2019)

- 4자 전략대화(이하 쿼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통 군사안보의 측면이 두드러짐.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함. 해당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기존 지역 질서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함(US DoD 2019/6/1). 2017년 이래 형성된 쿼드 2.0은 인도태평양 전략 공간에 대한 상이한 인식,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음(백우열 외 2019). 그럼에도 2020년 현재 쿼드 2.0은 대중국 봉쇄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쿼드의 경우 대외적으로 항해의 자유보장을 표명하고 있기에 비전통 군사안보의 측면도 없지 않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쿼드 국가 내 소다자협력의 경우 전통 군사안보의 측면이 두드러지기에 비전통 군사안보 측면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한정적임.
- NATO 등 동맹과 비교하여 쿼드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제도화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현재 쿼드 2.0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가고 있기 있음(Rai 2018). 쿼드에 참여하는 4개국 모두가 참가하는 정례적 대화체 혹은 협의체의 구성이 형성된바 없으며 자율성을 제한하는 협약 혹은 조약도 체결된 바 없음. 그럼에도 쿼드 국가 간 양자/삼자 간 군사훈련은 정례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대·발전되고 있음(Jimbo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쿼드 국가 간 전통 군사안보 측면의 제도화를 낮다고 평가할 수 없음.

② 말라바 훈련(Exercise Malabar)(Indian Navy 2019; Wyeth 2020; 최재덕 2020)

- [미국-인도-일본 3개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  
1992년부터 미국-인도 양국의 군사훈련으로 시작됨. 호주와 싱가포르 비정기적으로 훈련 참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일본이 상시 참가국으로 추가되어 3개국 훈련으로 확대개편하였음. 호주의 말라바 훈련 상시 참가 가능성이 확대되었음 (2018년 인도의 거절, 2020년 인도의 초청). 가장 최근 훈련인 2019년 훈련은 9월 26일 10월 4일까지 미·인·일 3개국 해군이 일본 근해에서 실시하였음. 훈련 내용은 복합 작전, 해상 순찰 및 정찰 작전, 수중 및 잠수함 전쟁, 의료 작전, 피해 관리, 헬리콥터 작전 그리고 방문, 탑승 수색 및 압류(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VBSS) 작전 등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중국과 인도 양자 간 국경 지역에서의 간헐적인 충돌의 지속에 따라 인도 내 반중 기조가 상승하였음. 이러한 기조는 중국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퇴출로도

나타났지만 말라바 훈련에 호주를 초청하는 방향으로도 발현됨(Pant and Saha 2020).

- 호주는 비정기적으로 말라바 훈련에 참여해왔음. 나아가 호주는 말라바 훈련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인도와 양자 간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해왔음(The Economic Times 2019/3/28). 이처럼 인도와 호주의 군사협력은 증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예단하기 어렵지만, 중인관계의 악화로 말라바 훈련에 호주의 정례적 참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말라바 훈련은 쿼드 구성국 모두가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군사훈련이 됨.

### ③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Exercise Talisman Saber)(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19; Stars and Stripes 2019/8/2)

- [미국과 호주의 양국이 2005년부터 격년 시행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  
호주와 일본의 협력 증진으로 인해 미·호·일 3개국 협력 증대[미호일 3자 전략대화(TSD)의 견고화]. 일본이 정기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가장 최근 훈련은 2019년에 이루어짐. 2019년 훈련은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호주 북부와 동부, EEZ에서 수행됨. 훈련 주최국인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뉴질랜드·캐나다·영국·일본이 참여함. 참가인원은 기존 25,000명을 상회하는 35,000명이 참여함. 참가국들은 군수 작전, 상륙 작전, 지상군 이동, 도심 작전, 항공 작전, 해상 작전, 특수 작전 등의 훈련을 진행함.

### ④ QUAD 내 양자 군사 협력

#### (1) 호주·미국 연계(정구연 외 2018, 14-18)

- 미국은 호주 북부(Northern Territory) 다윈 지역에 미군을 순환 배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분쟁 발생 시 개입을 위한 교두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함. 홀체(Holtze)에 위치한 로버트슨 기지(Robertson Barracks)에 해병 공지기동대(Marine Air Ground Task Force) 병력이 매년 순환 배치되고 있음. 이러한 병력의 배치 목적은 전략적 기동성을 갖춘 해병 공지기동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할 무력투사 능력을 확보함.

#### (2) 호주·일본 연계(Satake and Hemmings 2018)

- 2010년대 들어 일본과 호주의 양자관계는 사실상 동맹에 준할 정도(quasi-alliance)의 안

보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가령, 일본과 호주의 안보 협력은 2010년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2012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조인, 나아가 2010년부터 정례화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등의 실시가 보여주듯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호주가 일본에서 실시된 미·일·호 삼국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호주의 군사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에 일본이 참가하는 것에서 보듯 양국의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표11>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4자 전략대화 (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전통안보/경성비 전통안보	2017년 이래 다시금 본격화된 미일호인 4개국 간의 전략대화체.
말라바 훈련 (Exercise Malabar)	미국 인도 일본	전통안보	1992년 이래 미국과 인도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 2015년 이래 일본이 정례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미인일 3국 군사협력을 대표함.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Exercise Talisman Saber)	미국 호주	전통안보	2005년 이래 미국과 호주 양국사이에서 격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군사훈련.

### 1.5.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①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벨트(Asia-Africa Growth Corridor: AAGC)(연합뉴스 2019/1  
1/27)

○ [2017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연례 총회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  
도 총리가 작년 가을 양국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기로 합의  
하면서 시작한 소다자협력사업]

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에서 양국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복도'  
구상의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구체화하였으며, 2016년 아베 신조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양국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아프리카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제조업 발전을 위해 일본과

더욱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인도의 대(對) 아프리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565억 달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5번째로 큰 투자국이고 일본 기업들은 인도가 아프리카에 보유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다자협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12> 동남아시아 연관 역외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 현황 및 분석(경제/연성비전통안보)

이름	참여국가	분야	주요내용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벨트 (Asia-Africa Growth Corridor)	일본 인도 케냐 탄자니아	경제	인도, 일본,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 2.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 또는 대상으로 한 소다자협력

### 2.1. 소다자협력의 특성 (아세안 소다자 일반적 특성)

#### 2.1.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1) 아세안 국가 간 소극적 전통안보협력

- o 아세안 성립 초기 회원국들은 베트남 전쟁의 격화와 그 이후의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등을 겪으면서 반공주의를 기치로 집결하였음(외교부 2019, 19). 탈냉전 이후 아세안의 회원국이 확장되었으며 (공산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의 가입)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다자주의 협력체로 발전(외교부 2019, 21-22; 정구연 2020, 28).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 협력체가 전통안보의 측면에서 실질성과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아세안 회원국들은 공동안보를 위한 NATO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하지 않았으며, 개별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양자 군사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받고자 함. 이러한 아세안 회원국 내 집단안보기구의 부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외교부 2019, 31-34). 결과적으로 아세안은 역외 강대국과의 양자 관계 혹은 소다자 관계를 통해 독자적으로 영토 보존과 주권 수호 같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됨(Murphy 2017).



- o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으로 대변되는 집단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집단협의체는 의사 진행의 비효율화와 더불어 역외국가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Veto player)가 존재한다면 의사 진행이 봉쇄됨(Tan 2020). 가령, 아세안의 확장 안보 다자협의체 중 유일하게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북한 관련 결의안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들로 인해 통과되기가 어려움.
- o 또한 아세안 국가 내 전통안보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탈냉전 이후에도 역내 국가 간 해양과 영토 분쟁으로 인한 불신이 남아 있으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안보 위협이 부재하기 때문. 조안나 도브코우스카(Joanna Dobkowska)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개별 회원국들은 협력(cooperation: 캄보디아, 브루나이), 헤징(hedging: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연성균형(soft balancing: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독자적인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있음(Dobkowska 2014).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개별 회원국들이 미국, 일본, 호주 등 역외 국가들과 독자적 연계를 통해 헤징 전략을 추구할수록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음(정구연 2020, 30).

## (2) 역외 국가와의 적극적인 경성비전통안보 협력

- o 섬이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해적, 테러, 밀수 등을 막기 위한 해양안보와 반테러는 핵심적인 비전통 경성 안보 이슈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과 술루-술라웨시해 지역의 안보와 무역 경로를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대표적 예로 말라카 해협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중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 이니셔티브(RMSI)와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CAP) 대신 인도네시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각각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3개국이 말라카 해협 순찰 협력 메커니즘을 구성함(Matthews 2015, 3-8).
- o 이러한 역내 해양 소다자협력은 연관 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과 주권문제로 인해 제도의 구속력이 약함. 또한, 광범위한 도서 지역과 해양을 지키기에는 역내 국가들이 지닌 자원과 역량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미국, 일본과 같은 역외 국가와의 해양안보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미국은 해당 해역에서 안보적인 원조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임. 비록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역내 강국이 국내 상황과 주권침범에 대한 민감성을 이유로 표면적인 다자협력을 거부하였으나, 이들은 미국과

의 양자협력과 원조, 훈련 등을 통해 안보자원을 획득하고 있음. 말라카해협이 안정되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 해병대의 주둔과 순찰 그리고 해협 주변국의 해상 순찰 강화와 예방 활동의 결과 때문임.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은 소속 해군과 해경의 해상·항공 순찰 활동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들 연안 3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가 합동으로 하는 군사훈련도 시행함. 이외에도 미국은 이슬람 세력과 알카에다의 연계 그리고 이들을 저지,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국가에 많은 지원을 주고 있음. 미국은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에 5척의 순찰함을 기증하기도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동남아 반테러센터에 재정과 전문가를 파견함. 또한, 술라웨시해에 다수의 해안 레이더 감시소를 설치하고 말라카해협에서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말레이시아에 “Eyes-in-the-Sky” 등의 해양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163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관련 국가들과 반테러리즘 협력을 위해 씨캣(SEACAT)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김석수 2010, 54).

- o 다른 한편으로 마약, 자금세탁,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과 메콩강 유역의 5개 국가(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간 란창-메콩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이 지역에 광산, 농업, 관광 자원 등이 풍부하고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차후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주도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中新网 2011/10/31).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란창-메콩 유역을 따라 초국가적인 밀수, 인신매매, 자금세탁, 해적, 마약 등의 불법 행위가 다수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됨. 이에 실제로 ‘비전통안보’의 이슈를 중심으로 란창-메콩유역 법률집행 안보협력에 관한 연합 성명이 채택되었음. 해당 성명은 2011년 10월 5일 메콩강 살인사건 이후 중국의 주도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비전통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하게 되었음. 즉, 메콩강 유역에서 중국의 선박이 태국의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고 선원들이 살해당하자 초국가적 범죄 퇴치, 법률집행과 범죄자 인도, 범죄억제를 위한 정보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설립됨. 중국은 이를 통해 아세안에서 중국 주도의 비전통안보, 전통안보 분야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함(李春 2019; 新华网 2011/11/1).

## 2.1.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① 아세안 국가 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간의 그룹핑, 중복 현상
- o 아세안 내에서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 연성비전통안보 협력 현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 중 해양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

핀)을 한 그룹으로, 대륙국가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다른 한 그룹으로 세부 그룹화 할 수 있으며, 세부 그룹별로 다양한 소다자협력체를 구축하고 있으나 세부 그룹 간에는 눈에 띄는 소다자협력체가 없는 특이점이 확인됨.

- o 예를 들어 역내 소다자 경제협력체를 살펴보면, Indonesia-Malaysia-Singapore Growth Triangle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으며, BIMG-EAG A에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 두 소다자 경제협력체의 경우는 해양국가들 중심의 소다자 경제협력체라고 분류할 수 있음. 이와 비교하여,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nangle Area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어, 이 두 소다자 경제협력체의 경우는 대륙국가들 중심의 소다자 경제협력체라고 분류할 수 있음.
- o 각각의 그룹 내에서의 소다자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과 참가국이 중복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해양국가들 중심의 소다자 경제협력체들의 경우 IMS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역내 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가치사슬 구축 (싱가포르: 생산기획, 관리, 말레이시아: 반숙련 공업부품 생산, 인도네시아: 단순노동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BIMP는 역시 지역내 경제블록 구축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천연자원, 필리핀의 노동력, 브루나이의 자본력을 결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대륙국가들 역시 CLV-DTA를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지역 통합과 경제 발전,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ACMECS 또한 지역경제 발전과 개발 격차 축소 등 비슷한 목적을 두고 있는 소다자 경제협력체로 이해할 수 있음. 결국 주도하는 국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하고 참여국이 중복되는 여러 개의 소다자협력체가 생기게 됨.
- o 이렇게 해양국가들 간, 대륙국가들 간에만 경제협력체가 존재하는 것은 일면 그 국가군 내에서 서로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정책들이 많아서 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아세안이라는 공동체가 그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양분되는 현상임. 또한 베트남을 제외하고 농업 등 일차산업 중심의 대륙국가 그룹과 유통, 제조업 등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해양국가 그룹 간의 소다자 경제협력체는 부재한데, 이는 경제구조가 다른 국가들 간의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소다자협력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② 아세안 소다자협력의 허브로서의 메콩 유역 국가들

- o 앞서 이야기한 대륙국가들은 모두 메콩강을 끼고 있는 국가들로, 이 메콩 유역의 국가들이 아세안 소다자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미국의 제안으로 설립된 Lower Mekong Initiative에는 초기 미국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참여하였고, 이후 2012년 라오스가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게 됨. 주로 미국의 메콩 지역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협의하는 협의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중국 간의 소다자 협의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Greater Mekong Subregion은 참여 국가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자 설계한 소지역 협력체로, 특히 역내 국가들 간의 물리적 연계성(교통, 통신 등) 구축 사업에 관심을 가짐. Lancang-Mekong Cooperation은 이보다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하는 지역 내 협의체로 메콩 유역 인프라 조성 및 투자 사업과 수자원 관리를 비롯하여 정치 안보, 사회문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등 다양한 이슈에서의 협력을 추구. 이외에도 인도와 메콩 국가들 간의 협력체인 Mekong-Ganga Cooperation, 일본과 메콩 국가들 간의 소다자협력체인 Japan-Mekong Cooperation 등이 있음.
- o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이루어진 메콩유역 국가들은 이처럼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 다양한 아세안 밖의 국가들과 소다자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음. 이는 메콩유역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균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메콩유역 국가들과 아세안 밖의 국가들과의 협의체를 양자화 함으로써 메콩유역국가들의 이익을 각 협의체 내에서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o 이러한 메콩유역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인프라 구축 등의 원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o 메콩강 유역 국가들을 허브로 하는 다양한 소다자협의체와 비교할 때, 아세안 내 해양 국가들이 경제 및 연성비전통안보 소다자협의체 구축에 소극적인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임. 이는 해양국가들이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비해 지역적으로 더욱 분리되어 있어 경제발전 정도 등에서 차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공통의 이익이 되는 이슈들이 적고 또한 영토 분쟁 등 갈등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 ③ 소다자협력의 다층적 성격

- 대부분의 아세안 지역 내, 아세안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 간의 협력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한 이슈에 한정이 되는 이슈 별 소다자협력이 주를 이뤄 왔음. 통상 전통 안보, 비전통 안보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해적 등), 경제 등의 이슈별 소다자협력의 모습이 주를 이뤄 왔음.
- 최근 특정 이슈에 한정이 되는 소다자협력에 더하여 여러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 일례로 4자 전략대화(Quad)의 경우 그 근본은 군사 안보협력에 두고 있으나 최근 인프라투자나 공급망 확보 등 비안보, 경제적 이슈들을 포괄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음. 일례로 쿼드의 참가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인도, 호주는 2020년 9월, 통상산업부 장관 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안정적인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합의했음을 발표함(Bloomberg News 2020/9/1). 또한 일본, 인도,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세안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를 이미 시작하고 있음.
- 2012년 태국의 요청에 중국이 2014년 화답하여, 2014년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란창-메콩 협력 프레임워크 역시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지역 소다자주의 협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중국,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참여하는 이 협력 프레임워크는 농업 및 빈곤퇴치, 수자원 공동 운영 및 개발, 노동생산력 증대, 경제협력, 커뮤니케이션 등 전통적인 사회,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의 협력을 그 프레임워크 안에 두어 이슈의 다변화를 꾀함.

## 2.2. 소다자협력의 긍정적 역할, 전망 (구성국가조합별 + 이슈별)

### 2.2.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경성비전통안보 소다자협력의 활성화

- 동남아시아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해적,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경성비 전통안보 문제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다자협력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범 아시아적 다자 협력체인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이 2006년 일본 주도로 20개 회원국들이 아시아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행위와 강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그러나 아세안의 주요 해양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

시아는 이 협정에서 참여하지 않음. 소다자주의는 섬이 많고 국경 경비가 어려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러한 비전통 안보 이슈를 다루는 효율적 협력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소다자주의는 아세안 구성국 간의 분명한 공통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압이 아닌 자발적 협력 기제로 작동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슈임.

- o 비전통 해양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같은 섬이 많은 국가 간의 소다자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역외 국가 중에는 미국, 일본, 호주가 적극적으로 소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소말리아 및 동남아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적 행위로 피해를 본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세안의 다자주의 틀과 아시아 해적퇴치협정 내에서 해양안보와 반해적행위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구조와 해적진압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음. 비전통 해양안보는 해군력을 동원한 해양 훈련과 해양 능력 배양을 위한 물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해적 행위와 테러리즘, 밀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등의 사안은 미일 양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해양안전에 대한 영향력과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역외 국가들과 아세안과의 소다자협력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전통안보 협력으로 확대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민감한 이슈임.
- o 메콩-란창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역시 범죄, 테러리즘, 마약과 같은 경성비전통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메콩-란창 지역 국가들과 관련 소다자협력을 강화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남중국해 등과 관련해서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베트남, 태국과 중국 간의 소다자협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임.
- o 테러리즘과 범죄 네트워크가 초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에서 개방적인 경제와 대외 관계를 추구하는 한국이 이러한 경성비전통안보 협력을 위한 소다자협력을 확대해야 할 일차적인 이유가 있음. 조선 분야에서 선두를 다투는 한국이 발전된 해양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들과의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소다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슈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미·중 경쟁에 대응한 헤징(hedging)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이들과의 비전통 안보 소다자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한국이 중국의 견제에 대한 우려로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향후 핵심적 전통안보 영역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2.2.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①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국가 간 유대 강화

- 고조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과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아세안, 한국, 인도, 호주 등의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미중간의 갈등으로 인한 미중무역 감소로 인해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정도만 다를 뿐 지속될 가능성이 큼. 또한 한국과 호주 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함.
- 미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상대적 국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동안 발휘해 왔던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과 그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는 최근 미국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특히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임. 미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 국민들의 신뢰도는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약 3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아세안 국가 국민들의 일본, EU 신뢰도 평균인 약 50%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Cook and Ha 2020, 4). 반면 미국에 대한 불신 수준은 약 50% 정도로 중국에 비해 낮을 뿐 일본, EU, 인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임(Cook and Ha 2020, 4).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 부상하는 국력을 지역 내에 투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일대일로(BRI),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양자 간 차관 등을 통해 지역 내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2019년 아세안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9.2%의 응답자가 중국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71.9%의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음(Cook and Ha 2020, 3). 또한 중국이 BRI를 통해 막대한 외교적, 재정적 투자를 지역 내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의 응답자들이 그들의 정부가 BRI 프로젝트를 유지하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함(Cook and Ha 2020, 3).
- 소다자협력 구상은 이러한 지역 내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3의 국가를 통해 전략적 공간과 옵션들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아세안 국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미중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제 관계의 조성은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 호주 등 중국과 미국 경제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임.

- o 특히 급작스러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예측하기 힘든 전염병 등으로 인한 급속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복탄력성이 강하고(resilient), 견고한(robust)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음. 이미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을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도, 일본, 호주 3개국도 통상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함. 이러한 회복력 강하고 견고한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은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역내 국가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미국과 중국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협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이 추진 과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o 또한 경제 협력을 비롯한 연성 이슈에 대한 협력은 장기적으로 아세안 및 주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아시아 정체성(Asian Identity)” 혹은 “아시아-태평양 정체성(Asian-Pacific Identity)”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점차 높은 수준의 어려운 협력 (정치, 안보 협력)으로 협력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②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협력 방안 마련

- o 소다자협력은 이론적으로 비형식성(informality), 불규칙성(irregularity), 목적지향적 파트너십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협력 과제에 대해 빠른 속도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o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심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협력체를 빠르게 구상해서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음. 만약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보다 정형화된 협력으로 진화할 수 있고, 실패한다면 큰 비용과 확실한 확약(commitment) 없이 협력을 시도해 보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o 보다 예상 가능한 지역 내 떠오르는 이슈(emerging issue)에 대해서 실험적인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이 있음.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주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다자협력체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2.3 소다자협력의 부정적 한계, 전망 (구성국가조합별 + 이슈별)

### 2.3.1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 o 그동안 전통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과 신남방정책 지역 대상 국가들과의 소다자협력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당면한 사활적 안보 위협이 달랐으며,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임. 최근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한국의 가장 큰 안보 도전이었다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응하여 해양 주권과 자원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 안보 문제였음.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핵무기를 포함해서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한 위협 인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국가 간 역사적, 문화적 관계(relation ship)임(Wendt 1999; Hymans 2013).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느끼는 안보 위협이 한국보다 낮은 것은 자명함. 반면에 베트남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잦았던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받는 안보 위협이 한국보다 큰 것 또한 분명함.
- o 한국은 1990년대 초 북핵 위기 발생 이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중재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음. 다른 한편으로, 캄보디아와 같은 일부 친중 성향 국가들을 제외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중시해왔음(Murphy 2017). 앞 절의 소다자협력 현황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이러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안보 협력에 한국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음.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과의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에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동맹 구조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전통안보를 위한 소다자협력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o 이와 동시에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한 소다자협력 공간의 축소가 중요 부정적 변수임. 한국과 신남방정책 지역 대상 국가 간의 사활적 안보 이익의 차이와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협력 구도로 상당 부분 규정되어온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최근의 미·

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음. 첫째, 중국과 미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미·중 간 경쟁의 시각에서 일종의 진영논리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둘째, 중국과 미국이 이러한 경쟁 관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을 강압의 수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아세안은 자국의 외교정책이 미국과 중국을 자극할 경우 큰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됨.

- o 2017년 이래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형성한 4자 전략대화인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전략 공간에 대한 구성원 간의 다른 인식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소다자 협의체로 인식되고 있음(백우열 외 2019).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함. 이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기존 지역 질서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함(US DoD 2019/6/1).
- o 아직 NATO 등 다른 안보 동맹과 비교하여 쿼드 국가 간 협력과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음. 쿼드에 참여하는 4개국 모두가 참가하는 정례적 대화체 혹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참여국의 정책 결정 자율성을 제한하는 협약 혹은 조약도 체결된 바 없음. 그럼에도 쿼드 국가 간 양자/삼자 간 군사훈련은 정례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발전되고 있음(Rai 2018). 가장 최근인 2020년 8월 31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쿼드를 아시아의 NATO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힘(한겨레 2020/9/1). 이로 인해 쿼드가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더 커졌음. 비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미·일·호·인 4개국의 협력 수준이 현재보다 증강된다면 중국이 인지하는 포위 의식은 급속도로 고조될 것임.
- o 사드(THAAD) 사태에서 본 같이 중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간 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음(김동엽 2017, 322). 사드(THAAD) 사태의 후폭풍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대한 ‘경제제재’가 이어졌고, 2016-17년까지 한중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음. 이후 사드(THAAD) 문제는 임시봉합 되었지만, 한국이 쿼드와 같은 대중국 포위의 성격을 지닌 협력체에 명시적으로 참여한다면 중국에 미칠 파급력은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유사할 수 있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서 유사한 딜레마에 처한 아세안 국가들 역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전통안보 관련 소다자협력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됨.

### 2.3.2 경제/연성비전통안보

#### ①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한 소다자협력 공간의 축소

- 안보 분야 소다자협력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기타 연성 이슈들에 대한 소다자협력 역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역학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소다자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대상국 선정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상수를 전제하고 선정할 수 밖에 없음.

#### ② 소다자협력 vs. 형식성(Formality)

- 소다자협력의 가장 큰 장점은 비형식성에 있으며, 비형식적, 불규칙적 협력은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하지만 소다자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식성이 필요함. 특히 깊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적 협조(coordination)에 더하여 협업(collaboration)이 필요한데, 국가 간의 협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인 깊은 수준의 소다자협력을 위해서는 결국 정책 불이행(defection)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하고 불이행 시 페널티 부과가 가능한 강제(enforcement)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
- 바꿔 말하면 비형식성을 장점으로 하는 소다자협력이 깊은 수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형식적인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깊은 수준의 소다자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IV. 신남방 지역 대상 한국의 소다자협력 추진 방안, 로드맵 수립 (정책제안)

##### 1. 소다자 전략적 목표에 입각한 단계적 협력 추진 로드맵 원칙 수립

- o 소다자 공통이익/공통회피 이슈별 대상국 선정 → 소다자협력체 구성 및 발전 → 소다자 클럽 정체성/문화 형성 → 소다자 국가들 간 부분적 Trust 형성으로 비참여 국가들의 참여 동기 제고 및 타 이슈로의 확장 또는 종료와 같은 로드맵을 구성해야 함.
- o 한국의 대아세안 소다자협력에서 ‘적절한’ 수(number)는 몇인가? 국가 조합에 (미중이 켜졌을 때와 한국-중견국일 때), 이슈에 따라 어떤 국가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각 이슈/정책 영역별로 다자간 죄수의 딜레마 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최소화할 수 있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고려 후 전략 수립이 필요

##### 2. 협력 대상 (참여대상국 x 협력이슈/분야) 중심 소다자협력 추진 방안 분석

###### (1) 기준: 소다자협력 참여 대상국

- 한국-미국-동남아국가
- 한국-중국-동남아국가
- 한국-비미중-동남아국가

###### (2) 기준: 소다자협력 이슈/분야

- 전통안보 (동남아 해양 안보, 한반도 평화, 사이버안보 등)
- 비전통안보 (Maritime Capacity Building, 사이버안보, 보건/Covid-19 등)
- 경제 (인프라, 이민/이주, 4차산업혁명기술, GVC, 숲 등)
- 환경 (미세먼지, 숲, 자연재해 등)
- 문화 (공공외교 등)
- 위의 영역들이 겹치는 협력 분야
-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협력 분야

### 3. 신남방정책에서의 소다자주의 기본 역할, 가능성, 원칙 수립

- 국제적 규범·원칙과 한국의 국가이익이 소다자외교 참여, 주도, 확장, 축소의 기준임. 미중 양국 간 다양한 소다자협력 문제에는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단기 전략적 고려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원칙에 따라야 함.
- 궁극적으로 한국이 참여, 구성, 확장, 축소하는 소다자협력의 최상위 목표는 동남아시아 및 확장된 아시아 전체 지역의 중견국 간 다자 및 소다자협력체 구성 강화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버퍼존(buffer zone)을 구성하는 역할임. 다시 말해 한국의 다양하고 중층적인 소다자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및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처에 가장 유용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미국·중국 양국 모두가 참여하거나, 미국 또는 중국이 배제되는 소다자협력에도 참여. 아시아 지역 내 질서 주도권 확보 위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대립이 격화되면, 한국은 호주, 인도 및 소수의 아세안 중견국들과 같이 역내 중견국 간 소다자 외교·안보 협력을 통해 실리외교 추구. 한국의 소다자외교는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삼자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를 신남방정책 대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는 다양한 조합의 소다자 외교·안보 협력(필요성)으로 지평을 넓힐 필요
-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는 갈등·경쟁 구도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주도 소다자 전통 및 비전통 안보 또는 경제 협력의 각 단계에는 동참 가능. 미국과 지역 동맹국 간 기존의 양자, 소다자 군사훈련에 (1) 관심 표명, (2) 읊저버로 참가, (3) 부분적 참가 등 여러 단계와 종류의 참여 수위 조절
-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소다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및 능동적 제안
- 아시아 지역 내외의 중견국들과의 중층적 소다자주의 외교는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삼자 협력과 같은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현상향을 극복해야 함. 동북아시아 역외, 특히 인도태평양전략 또는 일대일로전략의 영역으로 지칭되기 시작한 범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구성 조합의 다양화와 소다자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경제안보, 인간중심안보(human-centered security), 그리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정책 분야 등으로 각 정책 영역별 다양화가 필요함.
- 예를 들어 MIKTA도 소다자협력을 통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로 접근할

필요. MIKTA의 한계로 인해 소다자 구성원을 다시 원래 3국으로 축소한 KIA(Korea, Indonesia, Australia) 조합이 더 효용성 있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에서 삼국의 협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능(function)’의 영역에서 협력.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부상 및 아세안 지도국으로서의 위상과 상위 중견국인 호주와 한국의 경제·군사력을 고려하면 역내에서 주요한 협의체가 될 수 있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호주와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유사하여, 한국과 호주가 아세안 핵심국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미국 주도 또는 중국 주도 소다자 안보 및 경제 블록화에 대응할 레버리지 확보 가능함. 이의 영역은 전통안보, 비전통안보를 비롯하여 경제 GVC 구성과 공진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미세먼지 대응, 산림 보호-산업 영역 대응,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영역 대응으로 확장 필요함.

- o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인·태지역에서 점증하고 있는 미국 주도 소다자 외교·안보협력과 역내 국가(한국 포함)가 주도하는 소다자협력 사이에서 전략적 접근 필요함.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은 (소)다자영역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선택은 불가능하며 각각의 여러 정책 영역들과 구성 국가들의 조합에 따라 이러한 ‘선택’ 국면은 파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o 오세아니아의 코와리(Kowari) 군사훈련, 동남아시아의 코브라 골드(Cobra Gold) 및 중국-아세안 군사훈련처럼 동북아시아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이 중국과 함께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소다자의 틀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예를 들어 해상충돌방지규범(CUES)을 명분으로 수행 타진. 4국 모두 2014년에 체결된 CUES의 서명국가. 중국과 일본이 CUES에 입각한 해상과 영공에서의 연락 메커니즘 구축됨. 중국과 일본의 해양 영토분쟁,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사건(2018년 12월) 등을 고려할 때 더욱 필요. 이를 확장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CUES와 유사한 국제해상수색구조(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AMSAR)를 명분으로 한 군사훈련과 소다자 형태의 안보 연계도 가능.
- o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조율이 시급함. 한국은 신남방정책과 미국 및 타 Quad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분야 모색 중이며, 역내국가의 인프라 투자 정책 조율이 하나의 접점이 될 수 있음. 한국과 미국(일본) 모두 역내국가, 특히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관심(경제적 기회). 한국과 미국(일본) 모두 기술 강국이므로, IT 등 첨단 분야와 보안(security safety)이 필요한 디지털 도시, 스마트 도시, 통신 장비

등에서 대 아세안 공동 출자나 협력 사업을 소다자 형태로 추진 가능.

- o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인프라 투자에서 공동 협력한다면, 반대급부로 중국의 일대일로에도 조건부 참여가 쉬워짐. 한국이 중국에 경도된다는 우려 불식. 일본이 이처럼 미국, 호주와 협력한 뒤, 중국의 일대일로에 조건부 참여 선언 (2017년). 일본은 2018년에는 중국과 Japan-China Third Country Market Cooperation Forum을 결성하였고, 양국이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52개의 협력약정서에 서명. 한국도 이러한 동남아시아 및 타 지역에서의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소다자 구성도 고려할 수 있음.
- o 경성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한국은 개별국가의 해양능력배양 및 해양상황인지 배양에 기여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소다자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은 지양. 중국은 이러한 소다자협력체를 중국의 해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공여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주요 수원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거나 잠재적 영토분쟁 지역이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존재.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비전통 (잠재적으로 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소다자협력 모색 요망.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이 분야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베트남과 인도에 한국이 참여하는 소다자협력, 또는 인도네시아, 호주를 연결하는 한국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소다자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에 기반 한 안보 개념 및 무기운용체계 공유 및 신뢰 형성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다자 전통안보 협력으로 발전하는 디딤돌로 기능할 것임.
- o 새로운 전통안보/경성비전통안보 영역, 예를 들어 사이버 안보 분야 고려 요망. 싱가포르가 좋은 사례임. 역내에서 사이버 안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 싱가포르가 2018년에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지역 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 전문 센터에 미화 약 22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다자협력 구상중. 한국-아세안-아세안역외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분야의 소다자협력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 요망.

#### 4. 잠재적 소다자협력 분야/대상국 정책 제언

##### 4.1 전통안보: 일반적 정책 방향 설정 - 북한 이슈를 중심으로

- 최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한국과 동아시아 역내 중견국가들이 지역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쿼드 플러스 동참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전통 안보/군사와 관련된 영역에서 소다자협력을 한국이 명시적으로 주도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큼.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같은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 다자기구 안에 안보 관련 대화체(security dialogue)를 출범시키고 해당 틀 안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같은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한 소다자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북한과의 외교적 소통 채널 확보: 한국의 핵심 안보 문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함. 전 세계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고립된 북한과 외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아세안에 있음.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과 가까운 아세안 국가와의 소다자협력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북한과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는 냉전기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큼. 북한은 냉전 시기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취했던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을 지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했음. 이러한 교류협력 기조는 김정일 시기에도 강화되었음(박성관 2003). 대표적으로 북한은 2000년에 ARF에 가입하고, 같은 해에 필리핀과 국교를 수립했음(성기영 2017).

<표13>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교관계 수립 연도

시기		외교관계 수립 국가(연도)
냉전	1950년대	베트남(1950)
	1960년대	미얀마(1961, 1975, 1983, 2007), 캄보디아(1964), 인도네시아(1964)
	1970년대	말레이시아(1973), 라오스(1974), 싱가포르(1975), 태국(1975)
냉전 종식	1990년대	브루나이(1999)
	2000년대	필리핀(2000)



출처: (이진영·손혁상 2019, 146)

- 북한은 아세안을 경제 협력과 국가재건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함(Tan et al. 2017).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10대 무역국 중 동남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와 태국이었음. 북핵 위기를 전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와 북한의 관계는 경제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임.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태국과의 경제교류는 최근 들어 대폭 감소했음. 2011년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되었지만, 2013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10대 무역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0대 교역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임(이진영·손혁상 2019, 154).
- 경제 분야의 변화와는 달리 주요 정치 인사들의 교류 및 친선관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특히 북한과의 교류가 오래된 국가일수록 친선관계가 강하게 유지되었음. 반면에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과는 경제적 실리 관계가 우선되고 있음(이진영·손혁상 2019, 166-167). 로동신문에 언급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빈도수를 분석해보면 북한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와의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음(이진영·손혁상 2019, 163). 김정은 집권 하의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는 개별 국가마다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음. 베트남의 경우 고위급 인사의 교류 등을 통해 정치관계는 우호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의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
- 종합하면 향후 북한과의 외교적 소통을 위해 향후 우리 정부와 협력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우호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로 5개 국가를 주요 파트너 국가로 선정할 수 있음. 5개 국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북한과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1)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돈독하며, 지속해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있음.
  - 2) 싱가포르와 태국은 자국에 북한 공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25년간 북한의 주요 교역 국가로서 역할을 했음. 최근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교역량은 감소했지만, 상황이 좋아진다면 대북한 교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됨.
  - 3) 베트남은 북한과 경제교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대북제재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국가임. 하지만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과 평양 모두 공관이 설치되어

있음. 특히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인사교류도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임.

- 4) 필리핀은 자국과 평양에 모두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그렇지만 최근 북한과의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송금 국가 중 하나임.

<표14> 북한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 설치 현황

국가	현지 공관	평양 공관
브루나이	X	X
캄보디아	O	O
라오스	O	O
인도네시아	O	O
말레이시아	O	O
미얀마	O	X
필리핀	X	X
싱가포르	O	X
태국	O	X
베트남	O	O

출처: (김형중 2018)

주1):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5개국과는 상호 공관 설치

- o 최근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한 논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이 지닌 자원의 제한과 외교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이들 국가에게서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움(Mueller 2019; Mueller 2020). 결국, 안보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도 이들이 당면한 해양 안보 문제에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o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이러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헤징(hedging) 전략으로서 ARF 혹은 EAS의 틀 안에서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다자 대화 협의체인 ‘East Asian Nuclear Security Dialogue’와 해양 안보에 관한 다자 협의체인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Dialogue’를 창설하고 이러한 다자 틀 안에서 적극적인 소다자 안보 협력을 추진 필요. 이와 동시에 국제범죄와 마약 문제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신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소다자협력을 확대 필요함.

- o 이러한 다자 협력체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 이슈들을 다루는 조정 레짐(coordination regime)으로 출범하여 점차 공동이익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협력 레짐(collaboration regime)으로 협력의 분야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민병원 2018, 198-199).
- o 조정 레짐은 사슴 사냥 게임(stag hunt game)과 같이 한 개 이상의 균형점들(equilibria)에 도달하기 위해 상호 간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 즉, 공동 회피의 딜레마를 극복(regimes to overcome dilemmas of common aversions)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 가능함. 라디오 주파수 배치나 항공 교통 관제 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 경우 하나의 균형점으로 합의를 이루면 누구도 배반해야 할 유인이 없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노력이 적음(Stein 1990, 41-43). 따라서 조정 레짐을 통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통해 강대국들이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o 협력 레짐(collaboration regime)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에서와 같이 하나의 균형점(equilibrium)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cooperation)이 필요하나 배반이 지배적 전략(dominant strategy)인 경우임. 국가 간 군비경쟁(arms race)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Stein 1990, 39-41). 이 경우 초국가적 권위체가 없는 국제구조 아래서 중견국이 협력을 유도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많음. 또한, 중견국과 약소국이 연합을 구성해도 그 안에서 같은 공동이익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동아시아 핵/해양 안보 대화 다자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정 레짐의 성격을 띤 소다자주의 이슈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협력 레짐은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구성해 나가야 함.
- o 미국·중국 양국 모두가 참여하거나, 미국 또는 중국이 배제되는 소다자협력에도 참여해야 함. 아시아 지역 내 질서 주도권 확보 위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대립이 격화되면, 한국은 호주, 인도 및 소수의 아세안 중견국들과 같이 역내 중견국 간 소다자 외교·안보 협력을 통해 실리외교를 추구해야함. 한국의 소다자외교는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삼자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를 신남방정책 대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는 다양한 조합의 소다자 외교·안보 협력(필요성)으로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음

## 4.2 전통/경성비전통안보: 협력 대상 중심 소다자협력 추진 구체 방안 제안

### 4.2.1 소다자 전통 안보 협력: 방산협력

#### (1) 목적 및 배경

- 신남방 지역 국가와의 방산협력은 경제적으로도 한국에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의 안보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음. 기존의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 자체에서도 방산 협력이 두드러짐.

#### (2) 참여 국가

- 한국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호주
- 아세안 국가 내 한국의 방산협력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3개국<sup>4)</sup>이 두드러지며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김한수 2019, 182-183). 이러한 기존 관계가 구축된 3개국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특히 한국이 아세안과의 방산협력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핵심적 축으로 삼아야 할 국가로 지역 강국이자 아세안의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에 주목할 필요 있음(Marsudi 2018).

#### (3) 주요 의제<sup>4)</sup>

- 한국의 초음속훈련기 T-50, 한화의 K-9 자주포와 같은 우수 군수품의 수출이 교류의 시작이 될 수 있음. 이미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호주와의 방산협력을 필리핀, 베트남으로 외연 확대해야 함. 이러한 무기 수출을 기반으로 현지에 군수 공장 건설, 기술 이전, 공동 무기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음. 이미 최대 방산교류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KFX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협력이 현재도 진행 중이기에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단, 방산 수출을 위해 역내국가의 ‘해양능력배양’에 기여하지만, 중국을 고려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과 3자 또는 4자 차원에서 협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보다 한국이 개별 국가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4) 박재적 교수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020년 9월 11일).

- 인도네시아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역외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Scott 2019). 이에 따라 한국이 구상할 수 있는 방산협력 소다자안으로 인도네시아와 밀접한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호주를 포함한 소다자체를 제시할 수 있음. 또한, 대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호주와 협력할 분야가 적지 않음(Medcalf 2014). 따라서, 한·인·호(KIA) 3자간 방산분야 소다자협력을 모색한다면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음.
- 최근 몇 년 간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까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도 많이 있었음. 전통적으로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를 가장 큰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생각해왔으며, 동티모르 독립, 발리 테러 사건, 불법이민 등의 문제로 인해 두 국가가 갈등을 겪었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한·인·호(KIA)협력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삼자 간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있음을 인지해야 함.<sup>5)</sup>

#### 4.2.2 소다자 전통 안보 협력: East Asian Nuclear Security Dialogue

##### (1) 목적 및 배경

- 단기적으로는 핵의 우발적 사용과 핵확산으로 인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조정 레짐(coordination regime)을 구축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닌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확보.
- 북한이 초기 다자 대화에 불참하더라도 참여국들과 핵 안보 대화를 지속하여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지렛대를 확보해야 함. 장기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안보와 관련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포괄적인 다자 핵 안보협력 레짐(nuclear security collaboration regime)을 구축하여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사용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
-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최근 가속화 되는 동아시아 내 핵 군비경쟁도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국가 지도자들과 일반 대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표

5) 이재현 박사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020년 9월 25일).

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 전략무기(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편대)를 동원한 군사훈련의 증가, 2019년 미국의 중거리 핵전략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탈퇴, 중국의 미사일 능력 확대와 항공모함 증설 등에서 핵과 관련된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 참여 국가

- o 6자회담(Six-Party Talks) 참여국가 + ASEAN 10개국
- o 2003년 2차 북핵 위기 때부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Six-Party Talks)에 참여해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당사자인 북한의 안보 대화 참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기여 할 것임.
- o 1997년에 발효된 동남아시아 핵무기 자유 지역(the Sou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SEANWFZ)에 합의한 아세안 국가들은 핵무기의 개발, 보유, 및 핵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함(ASEAN 2012). 이들이 동아시아 핵 안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협의체의 신뢰도와 진정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주요 의제

- o Level 1 -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 방지를 위한 조정 레짐 구축: 위기 시에 상호 간에 연락 가능한 핫라인 설치, 핵 전략무기가 동원된 훈련이 시행되었을 때 이를 협의체 참여 국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치
- o Level 2 - 수평적 핵확산(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의 방지: 핵분열물질(nuclear fissionable material)의 국가 간 거래나 테러집단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강화. IAEA의 사찰 활동에 대한 비핵국가와 핵국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o Level 3 - 수직적 핵확산(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의 방지: 역내 모든 핵국가들의 핵무기 증가를 막고 통제(arms control)할 수 있는 다자적 협력 강화
- o Level 4 - 국가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 핵무기 위협이 강압 외교(coerciv

e diplomacy)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자제. 핵무기가 군사 억지력(deterrence capacity)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축소. 핵무기의 선제 사용(nuclear first-use) 금지 선언.

- o Level 5 - 지역 내 핵무기의 철수, 궁극적인 해체 (regional nuclear disarmament): 역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철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궁극적 목표인 핵무기의 완전한 해체를 동아시아에서 달성.

#### 4.2.3 소다자 전통 안보 협력: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Dialogue

##### (1) 목적 및 배경

- o 최근 중국이 무인도에 건설하고 있는 군사기지나 인공 섬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과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훈련에 대응하는 미국의 해양 훈련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 단기적으로 동아시아 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양 분쟁과 갈등이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 레짐의 구축의 필요가 요구됨.
- o 2014년에 서태평양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해상충돌방지규범(Code of Unexpected Encounter at Sea: CUES)이 체결되었음. 이 협약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음(not legally binding). 동남아시아에서는 CUES와 유사한 국제해상수색구조(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AMSAR)를 위한 군사훈련이 있음. CUES를 명분으로 이를 확장하여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계하는 소다자 형태의 해양 군사훈련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 가능.<sup>6)</sup>
- o 해적 행위와 마약유통 같은 초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 모색. 유엔 해양조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으나 집행력이 약함. 이러한 다자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소다자 해양 협력 기구를 출범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목표.
- o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항해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해양 자원의 평화적인 사용을 위한 협력을 유도하고 관련 해양 국제법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레짐의 구축을 목표

---

6) 박재적 교수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020년 9월 11일).

## (2) 참여 국가

- o ASEAN 10개 회원국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 (3) 주요 의제

- o Level 1 - 동아시아 해양 안전장치(safety mechanism) 조정 레짐 구축: 평시 해양 군사훈련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상호 간에 소통하고 조정하여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을 수 있는 연락 채널과 위기 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연락망 구축. 해상충돌방지규범(CUES)의 확장 및 제도화.
- o Level 2 - 동아시아 해양 범죄 감시 활동 강화: 해적 행위, 마약유통과 같은 국제적인 범죄 행위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기존의 양자, 삼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 범죄 방지 훈련을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해상충돌방지규범(CUES)과 국제해상 수색구조(IAMSAR)를 연계하는 소다자협력 추진.
- o Level 3 - 동아시아 해양 분쟁 조정 기구 구축: 해양 주권과 관련된 회원국 간 분쟁이 국제기구로 가기 이전에 지역 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및 메커니즘 구축.
- o Level 4 - 항해의 자유와 해양 자원의 평화적인 이용 원칙의 실현: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내 모든 국가가 공동 해양 자원의 평화적인 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

### 4.2.4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해양 능력 배양(Maritime Capacity Building)

#### (1) 목적 및 배경

- o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세안 국가의 해양 능력 배양을 위한 소다자협력은 해양 군사훈련에 비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적으면서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전통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대표적인 참조 사례로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순시선을 공여함과 동시에 인적 교류와 해당 분야 능력구축에도 조력하고 있음. 한국은 일본의 전략적 ODA 사용과 그 지원 방안을 분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강철구 2015, 132-145; 김석수 2016, 8-11; Yamamoto 2020).

#### (2) 참여 국가



- 한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 일본, 호주
- 해양능력배양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소다자협력이 1차 목표지만, 나아가 한-일-호 3국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 소다자협력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나, 중국을 고려해 이러한 일-호와의 3자 협의체는 신중해야 함.

### (3) 주요 의제

-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순시선 공여, 다자안보 대화, 친선 유대를 위한 핵심 엘리트들과 학생들의 교류, 해군함정 교환방문, 훈련 참관, 실무협력 분야에서 정보 및 교육 교류, 작전 협력 등이 가능함(김한수 2019, 177; 이기태 2020, 278).

## 4.2.5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마약, 밀수)

### (1) 목적 및 배경

- 동남아시아에서 국제화 추세에 따라 초국경적인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의 황금 삼각지대(미얀마, 라오스, 태국)에서 생산되는 마약들이 중국 남부와 홍콩, 마카오 등의 국가를 거쳐 한국까지 유통되고 있음.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한국은 2018년부터 대량의 필로폰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음. 2018년 1-8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 절반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국적자였음(한국경제 2018/10/27). 한국은 마약, 밀수와 같은 초국경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의 생산지이자 유통지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중국은 메콩 유역의 국가들과 인접한 윈난성 지역에서의 마약 생산, 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해 20년 이상을 노력해왔음. 중국은 1995년 베이징 회담과 2011년 메콩강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란창-메콩 사법집행안전협력을 설립하며 공동순찰을 진행해왔음. 그러나 중국과의 이러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Luong 2019a). 동남아 국가들의 각기 다른 사법체계와 주권 보호, 부패, 경제와 기술 수준, 인력 부족 등은 협력을 가로막는 물질적 방어막이었으며,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역시 실질적으로 협력체 구성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였음. 예컨대, 베트남은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란창-메콩 유역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대량의 마약을 생산하고 사용하며 유통하는 등 마약 문제에 있어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란창-메콩 사법집행안전협력체에 포함되지 않음.

- 한국은 2019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국-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였음. 중국과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비전통안보 분야에서는 주로 마약, 밀수, 자금세탁, 인신매매 등의 불법, 부패 행위가 강조되고 있음. 메콩 유역 국가들의 중국 지배에 대해 우려와 주권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들을 역내 협력체에 끌어들이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지역의 비전통 안보 소다자협력에 적극적인 참여 혹은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 (2) 참여 국가

- 한국 + 메콩 유역 국가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 중국

## (3) 주요 의제

- 최근의 초국경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거래자들은 통제가 약한 부패, 불안정, 저개발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법집행과 정보공유 및 보안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체제의 내실화와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사법공조조약의 체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의 공동범죄투쟁기구의 설립 주장의 필요성이 강조됨(한용섭·이신화·박균열·조홍제 2010). 관련 연구들은 한국이 검찰과 세관, 국정원 등의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베트남과 라오스 등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마약의 유통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지만, 이들 국가는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으며, 국경 분별이 모호하여 마약 유통의 추적과 마약범의 검거가 어려움. 또한, 베트남의 습하고 안개가 많이 끼는 기후는 유통자들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함.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늘어나는 인구와 다민족성, 미취업자들은 마약의 이용과 생산 등의 이익에 노출되며, 유통원으로도 이용됨. 이러한 국가들의 마약 생산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 현지 인적자원의 활용: 국경보호대, 이민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의 지원과 이들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마약 유통을 차단, (2) 국경연락사무소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베트남-라오스의 산악지대에 있는 국경연락사무소를 관리하는

소수민족의 재정적 곤란과 현대장비와 어플리케이션의 부족을 해결하도록 지원(Luong 2019b), (3) 전자여권의 도입 촉진: 한국은 ICT 기술에 기반을 둔 국경관리와 전자여권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국가이기에 이 분야에서 뒤처진 국가들의 전자여권 도입과 국경지역 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o 이 밖에 북한이 연루된 초국경적 문제를 메콩 유역 국가들과 소다자협력을 통해 함께 대처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서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북한은 마약과 위조화폐 제조, 암호화폐와 해킹 등의 사이버 안보, 밀수, 자금세탁 등에 개입해 왔으며, 특히 북한이 동남아 메콩 유역의 다수 국가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건이 존재함.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북한 외교관들은 태국과 방글라데시에서 중고차와 중고 휴대폰 등의 밀수에 개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태국 방콕의 공항에서 북한산 무기를 제3국에서 운송하던 도중 타 국적의 화물기가 억류됨. 이외에도 베트남에서는 가짜 담배로 채워진 컨테이너가 적발함. 또한, 2014년 캄보디아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수도인 프놈펜에 있는 북한의 비밀장소를 급습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법 프로그램 제조 일당을 적발함(함중영 2017, 118-131). 미국은 북한의 자금세탁, 인권, 무기판매를 막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이처럼 아세안 메콩 유역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와 협력을 시도해왔음. 한국이 이러한 소다자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음.

#### 4.2.6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사이버 안보 협력

##### (1) 목적 및 배경

- o 최근 동남아시아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위협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베트남은 2017년 사이버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액이 5억 달러를 넘었으며, 2018년에는 스파이웨어에 56만대의 PC가 감염되었다고 보도됨(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2010년 미얀마의 우편정보통신부는 디도스에 의해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미얀마의 G메일 계정이 공격을 받았다고 제보됨(Chang 2017). 라오스의 사이버 보안 대응능력은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와 함께 최하위로 평가됨. 캄보디아는 2018년 한 해 459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인터넷 사용자의 30.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됨(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 다른 한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아세안 중견국가들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음. 한국은 사이버 안보 능력을 키우고 공동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러한 아세안 중견국과 사이버 안보를 위한 소다자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더불어 사이버 안보의 인프라와 재정이 취약한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과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사이버 안보 기술 관련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는 경제적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을 것.

## (2) 참여 국가

- 한국 + 아세안 중견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 사이버 안보 취약 국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 (3) 주요 의제

- 싱가포르는 2018년 3,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여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역내 사이버 안보 역량 육성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깊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와도 협력을 진행하고자 함(channelnewsasia 2018). 말레이시아 역시 다양한 국제, 지역 내 사이버 안보 다자협력체에 참여하고 있음(Cybersecurity Malaysia 2019).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앞서있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견 국가들과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여 한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을 키우고,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다자적 협력을 도모해야 함.
-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큼. 예컨대, 중국 해커들은 스카보러섬을 둘러싼 중국-필리핀 간의 대립이 격화된 이후 필리핀 내 여러 웹사이트와 정부 기관을 공격하여 논란을 빚은 바가 있음(연합뉴스 2012). 이들 국가는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협력이 필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KIA(Korea-Indonesia-Australia)와 같은 중견국 간의 사이버 안보 소다자협력체를 아세안 국가들과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함.
- 마지막으로 가능한 소다자협력대상은 사이버 안보의 인프라와 재정 등이 취약한 미얀

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국가임. 이들 국가의 경제가 발전될수록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변 아세안 국가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한국은 사이버 안보 취약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해 사이버 안보 관련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함.

#### 4.2.7 소다자 비전통 안보 협력: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COVID-19)

##### (1) 목적 및 배경

- o 2020년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야기된 세계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함 (강수정 2020, 54). 이 가운데 한국은 최근에도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COVID-19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Martin and Yoon 2020). 한국 정부가 검사를 통해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방역모델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던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세계보건총회 사무총장이 언급하였음(최경희 2020). 특히, 해당 모델은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2020년 9월 현재로서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임. 이러한 한국의 방역모델과 경험을 싼남방 지역 국가들에 소개하고 방역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소다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o 아세안국가들의 COVID-19 상황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임.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치·경제 양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sup>7)</sup> 주목해야 할 점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이 자국의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지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아세안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최경희 2020). 이러한 아세안 내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한국은 COVID-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과 협력하여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참여 국가

- o 한국 + COVID-19 방역 우수 국가(베트남, 태국) + COVID-19 방역 취약 국가(인도네

---

7) 서지원 교수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020년 9월 24일).

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3) 주요 의제

- o 방역 우수 국가와의 협력(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대표적 방역 모범국으로 베트남을 거론할 수 있음. 2020년 9월 24일 오전 9시 기준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68명,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보고되고 있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20/9/25). 2018년 기준 인구수가 9554만에 이르는 인구대국 베트남에서 이러한 성취는 예외적임(World Bank 2020). 특히, 7월 31일 사망자가 2명 발생하기 전까지 베트남은 COVID 19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 성취에 대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음(Worldometer 2020).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과 COVID-19 대응 성과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이미지와 신뢰도를 상승시키며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o 이러한 베트남의 모델과 한국의 K-방역을 비교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까지 COVID-19의 확산을 막을 방안을 도출해야 함.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성과는 방역 초기 적극적인 조치를 연달아 취한 베트남 당국의 결정에서 기인한 바가 큼. 베트남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임시휴교령(2월 3일), 모든 비자발급 중지(3월 18일), 전국적 외출 제한령(4월 1일) 발효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최경희 2020). 이러한 능동적인 조치는 확진자수와 사망자 수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성과를 가져왔음. 특히, 베트남이 비교적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트남의 정치체제의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일당 권위주의 체제의 뛰어난 위기대응 능력에 관한 주장을 편 게디스(Geddes) 등의 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당의 폭넓은 후견인 네트워크를 토대로 탁월한 사회동원 능력과 공세적인 봉쇄 전략, 시민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음(Geddes et al. 2018).
- o 2020년 4월 14일 아세안 +3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한 핵심 내용(감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조성, 필수 의료용품 비축과 신설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국은 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세계적 보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소다자협력을 추진해야 함.

### 4.3 경제/연성비전통 안보: 협력 대상 중심 소다자협력 추진 구체 방안 제안

#### 4.3.1 일반 경제 제 분야에서의 소다자협력

- o 통화, 무역, 금융(투자), 개발협력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있어서 소다자협력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분야는 무역과 투자 분야임. 통화 안전망 구축의 경우 역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ed)가 이미 존재하고, 통화 안전망의 특성상 다수의 국가가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높기 때문임. 개발협력 역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 다자간개발은행 들과 함께 양자간 개발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로 볼 때, 다자간개발은행이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양자간 개발원조와 비교해 유의미한 새로운 개발협력 소다자협력 의제 발굴이 필요함.
- o 무역분야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그리고 양자 무역협정들이 다수 존재함. 이중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회원국으로 추진하여 2019년 말 인도를 제외한 15개 회원국가가 협상 타결을 선언함. RCEP은 아세안을 허브로 하는 기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 중국-아세안 FTA 등)들이 서로 간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 (spaghetti bowl problem)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도됨. CPTPP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주도로 협상의 진전이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여 2018년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주도로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무역체제를 심화시키려는 시도로, 무역 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정부조달정책, 환경규제, 금융, 지적재산권, 투자자 보호 등 비전통적인 무역관련 이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
- o 한국은 아세안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가지고 있고, RCEP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CPTPP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한국, 호주,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외의존도를 점차 줄이면서 미중 갈등이나 다른 외적 변수들에 의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회복탄력성이 강하고(resilient), 견고한(robust)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견고한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및 투자 관련 컨설팅, 인적 교류 및 직업 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보다 심화된 수준의 경제협력체 구상이 필요함.
- 이러한 심화된 수준의 소다자협력은 클럽재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 소수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4.3.2 경제 분야 중 이민/이주 분야에서의 소다자협력<sup>8)</sup>

- 한국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한 일본 등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노동이주민을 비롯한 결혼, 유학, 연수 등을 목적으로 상당수의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있음. 이러한 이주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와 연계된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이주문제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 이주 유입국으로 송출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아세안 국가 중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민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시에는 일본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동 국가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경쟁해야하기에 이주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에 따른 노령 인구 증가와 노동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간호, 간병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로부터 간호, 간병 인력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간호, 간병 인력의 확보를 위해 아세안국가 인력의 체류자격을 2개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공격적인 이주 정책은 일본을 한국보다 매력적인 이주 대상국으로 만들 것임.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공격적인 이주 정책과 비교할 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아세안의 주요 이주민 송출국들의 이주민들에게 선택이 주어질 경우 한국 보다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 한국에게 아세안 국가들은 이민 협력을 해야 하는 주요 대상국임. 현재 외국인 노동자

8) 이병하 교수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020년 9월 11일).



고용허가제를 국가 간 MOU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 중 7개국이 아세안 회원국임. 또한 이민통계, 단기 방문자, 단기체류자 통계를 보더라도 아세안 국가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현 한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람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으로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을 명시하고 있어, 신남방정책과 정책적 정합성이 높은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때 주요 국가들을 선정하여 실험적인 이민정책을 소다자의 형태로 추진해 볼 만함.

o 가능한 주요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른 이슈

o 한국은 현재 주로 저숙련 노동자 (low-skilled workers)를 받아들여 일정 기간 노동을 허가하는 형태로 노동이주자를 받고 있음. 한국의 인구구조의 추세를 살펴볼 때, 현재 부족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숙련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도 장기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KOICA 등을 통해 제공되는 대외원조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 외국의 노동자들을 선발하여 현지에서 직업 교육을 시키고, 그 숙련노동자들을 한국의 기업들이 채용하는 형태의 복합적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은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②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는 ODA 사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이민행정 거버넌스를 전수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o 이를 통해 효과적인 ODA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등 이주와 관련 제반 이슈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됨. 출입국 분야에서의 노하우 전수 (전자화된 비자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 등을 통하여 ODA 수원국의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이민 거버넌스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증거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입국 데이터 구축과 공유를 위한 소다자 이주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지역적 이주 데이터 시스템은 주요 비전통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신매매, 마약밀매, 밀수, 테러리즘 등의 초국가범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공통의 이익 아젠다로 인식할 것임.

#### 4.3.3 경제 분야별 소다자협력 대상국 선정 전략 제언

- 아세안의 경제부문 소다자협력 분석을 위해 FTA체결과 협정 현황을 통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주요 관심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함. 이 분석에는 체결과 효력(Signed and In Effect)단계의 FTA만 포함함.
- 첫 번째로 아세안 자체를 1개국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세안과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총 11개국의 FTA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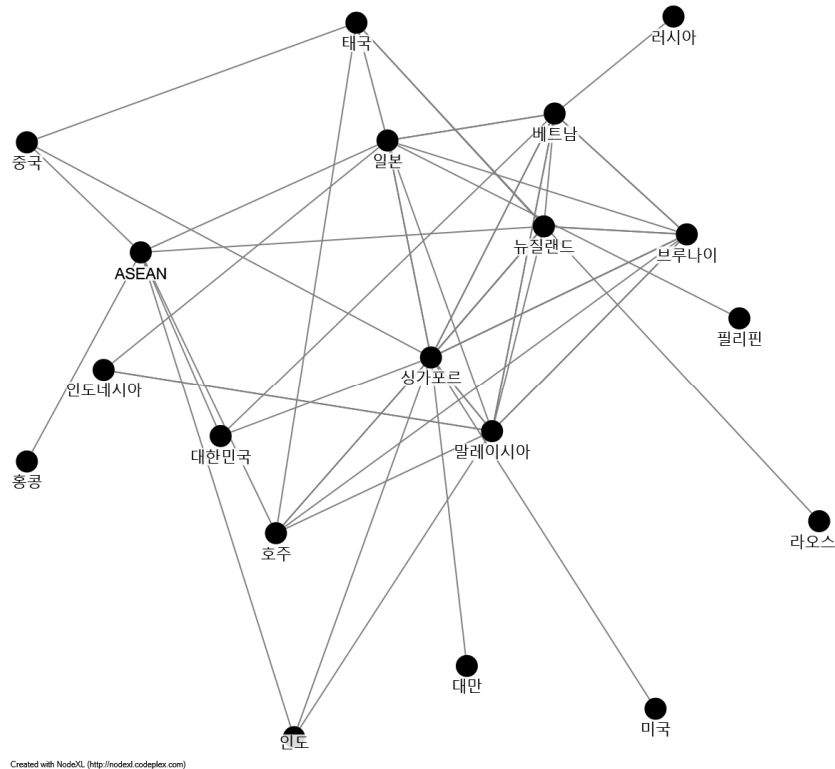
<표15> ASEAN + 아세안 10개국 FTA체결 현황

국가	총 파트너	아세안파트너	한국과의 FTA
ASEAN	8	1	1
인도네시아	2	1	0
말레이시아	8	4	0
필리핀	1	0	0
싱가포르	16	4	1
태국	5	1	0
브루나이	7	2	0
베트남	8	3	1
라오스	1	1	0
캄보디아	0	0	0
미얀마	0	0	0

- 아세안 1개국은 아세안 대 대한민국, 중국, 일본과의 양자 FTA 협정 (예: 한아세안FTA: AKFTA) 등을 통해 총 7개국과 파트너를 맺고 있으며, 이 중 아세안 1개국의 파트너는 아세안 10개국들 사이의 FTA 협정인 ASEAN Free Trade Area (AFTA)가 있음. 이외 아세안 10개국 중 아세안 국가와 가장 많은 파트너 관계에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이는 하기의 그림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싱가포르가 네트워크 관계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있는 것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함. 싱가포르 외 아세안 파트너가 가장 많은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상대적으로 아

세안 국가 중 경제개발 정도가 높은 편이라 그런 것이라고 추정되며 하기의 그림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근접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AFTA협정을 제외하고는 아세안 혹은 주요 국가와의 어떠한 파트너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에 네트워크 분석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존재하지 않음.

<그림 1> 아세안 및 주요국가 FTA 네트워크 분석



출처: 저자 작성.

- o 위 네트워크 그림은 <표15>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세안을 독립된 1개국으로 간주하고 아세안 10개국과 주요 주변국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의 관계를 보다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결과임.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가장 가까운 양자관계에 있고 아세안의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함을 알 수 있음.
- o 다음으로, 아세안을 1개국으로서 설정하였을 때 총 11개국의 주요 FTA협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 아세안 국가의 개수와 명칭이 포함된 총 11개국의 자유무역협정 정보는 아래 <표 16>과 같음.

<표16> ASEAN 1개국 + 아세안 10개국 포함 FTA협정 현황

협정 (Agreement)	참여 아세안 국가 개수	참여 아세안 국가 명칭
AFTA	1	ASEAN
AKFTA	1	ASEAN
AJCEP	1	ASEAN
ASEAN-India CECA	1	ASEAN
ASEAN-Hong Kong / China FTA	1	ASEAN
ACFTA	1	ASEAN
ASEAN-ANZ FTA	1	ASEAN
PTA-D8	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Japan-Indonesia EPA	1	인도네시아
CPTPP	4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MAFTA	1	말레이시아
MJEPA	1	말레이시아
Malaysia-New Zealand FTA	1	말레이시아
Malaysia-India CECA	1	말레이시아
JPEPA	1	필리핀
Trans-Pacific SEP	2	브루나이, 싱가포르
India-Singapore CECA	1	싱가포르
JSEPA	1	싱가포르
SAFTA	1	싱가포르
PRC-Singapore FTA	1	싱가포르
Singapore-Taipei / China FTA	1	싱가포르

Laos- Thailand PTA	2	태국, 라오스
PRC- Thailand FTA	1	태국
TAFTA	1	태국
ThaiNZCEP	1	태국
JTEPA	1	태국
Japan- Brunei FTA	1	브루나이
Republic of Korea - Viet Nam FTA	1	베트남
Japan- Viet Nam EPA	1	베트남
Viet Nam - Eurasian Economic Union FTA	1	베트남

- o <표 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을 1개국으로 설정하였을 때 총30개의 FTA 협정이 존재하며, 이 중 아세안 국가들이 가장 많이 포함된 협정은 CPTPP이며 그 다음으로는 PTA-D8, Trans-Pacific SEP, Laos- Thailand PTA가 있음.<sup>9)</sup>
- o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경제부문 소다자협력 분석을 위해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체결과 협정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아세안 국가들은 2012년 3월 ‘포괄적 아세안 투자 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s: ACIA)를 제정하여 기존 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했던 아세안 투자 구역 협정(ASEAN Investment Area)과 아세안 투자 보장 협정(ASEAN Investment Guarantee)을 대체함. 이는 지역 내의 “자유롭고 경쟁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환경”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임. 또한 ACIA는 아세안 회원국의 동의가 있을 시 아세안 비회원국이 ACIA에 의해 안정적인 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음.
- o 이러한 아세안 내 포괄적인 지역투자 협정 외에도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하여 다른 비회원국들과도 양자간 투자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 및 활용하고 있음.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이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보호 또는 규제하기 위해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함. BIT협정은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구별 없이 투자에 관한 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9) 아직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RCEP은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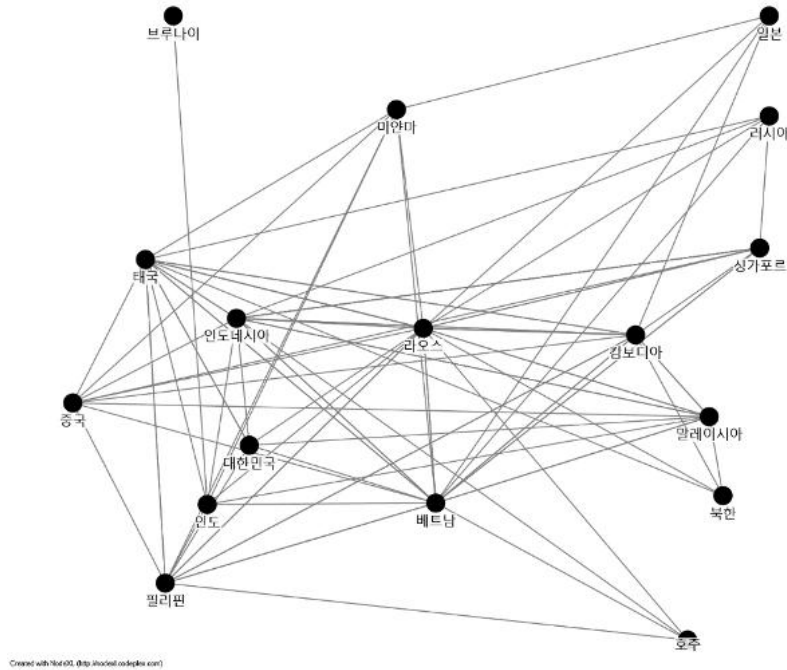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 이를 위해 BIT협정은 양국 간의 협상 이후에 투명하고 효과적인 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함. 또한 외국 투자에 대한 대우의 규칙을 확립하고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는 절차를 확립하여 외국영토에서 실시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지막으로 투자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확실하게 두어 투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표17> 아세안 10개국 BIT체결 현황

국가	협정 파트너	아세안 파트너	한국과의 BIT	북한과의 BIT
브루나이	4	0	X	X
캄보디아	19	7	X	O
인도네시아	59	7	O	X
라오스	26	9	O	O
말레이시아	68	4	O	O
미얀마	7	4	X	X
필리핀	36	5	O	X
싱가포르	42	5	X	X
태국	44	7	O	O
베트남	53	7	O	X
평균	35.8	5.5	6	4

- o 위의 <표 17>은 아세안 10개국의 BIT체결 현황을 정리한 것임. 먼저 BIT를 가장 많이 맺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전 세계 68개국, 그리고 4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BIT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반면에 가장 적은 수의 BIT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브루나이로 전세계 국가 중 단지 4개의 국가와 BIT를 체결하고 있음. 아세안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36개의 BIT를 다른 나라와 체결중이며 또한 각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과반수의 아세안 회원국과 BIT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o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BIT체결에 관해선 아세안 회원국의 현황이 매우 상이함. 특이점은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남한과 함께 북한과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임. 먼저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은 남, 북한과 동시에 BIT를 체결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오로지 북한과만 BIT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대한민국과만 BIT를 체결하였으며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남, 북한 양쪽 모두와 투자협정을 맺지 않고 있음.

<그림 2> 아세안 및 주요국가 BIT 네트워크 분석



출처: 저자 작성.

- o 위의 <그림 2>는 아세안국가와 주요 주변국들 간의 BIT체결여부를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 결과임. BIT체결의 중심성을 분석해 보았을 때 라오스는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주변 국가와 가장 많은 BIT를 체결하여 그림의 중앙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에 제일 적은 수의 BIT를 체결하고 있는 브루나이는 위의 그림에서 외각에 위치하여 BIT 부분에서는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o 주요 국가들의 현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6개의 아세안회원국과 BIT를 체결함으로써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외에 인도와 중국이 중심성 거리로는 중앙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러시아, 호주, 그리고 일본이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음. 미국은 어떠한 아세안 회원국 하고도 BIT를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위 그림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
- o BIT 네트워크 분석의 정책적 함의로는 북한의 적극적인 BIT 네트워크 참여를 꿈꿀 수 있으며, 앞선 4.1에서 이야기된 북한 관련 소다자협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현재 존재하는 BIT 네트워크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를테면 한국과 북한 모두와 양자간 투자협정을 가지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완호, 해제될 경우를 대비 투자 계획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이주 분야 소다자협력체 구축을 위한 참여 대상국 고려를 위해 이주 부문 자료를 검토함. 다음의 표는 특히 한국 노동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메콩 5개국 국민의 한국으로의 이주 동향을 보여줌.

<표18> 메콩 5개국 출신 인구의 국내 체류 동향(2014-2019)

국적/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메콩 5개국	캄보디아	38,395	43,209	45,832	47,105	47,012	47,565
	라오스	8988	1,004	1,146	1,221	1,568	1,823
	미얀마	15,921	19,209	22,455	24,902	28,074	29,294
	태국	94,314	93,348	100,860	153,259	197,764	209,909
	베트남	129,973	136,758	149,384	169,738	196,633	224,518
	총계	287,591	293,528	319,677	396,225	471,051	513,109

출처: (백용훈 2020, 298)

주1) 단위: 명

- <표18>을 보면 매년 메콩5개국 출신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개국 중 베트남과 태국 출신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19년 12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2,524,656명이고 이 가운데 아세안 10개국 출신 체류외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 중 25.6%인 647,460명임. 아세안 출신 중 메콩 5개국 출신은 79.2%인 513,109명에 이르러 절대다수를 차지함. 또한 메콩 5개국 중에서도 베트남과 태국 출신이 약 84%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음. 베트남인이 224,518명(메콩 5개국 중 43.8%, 아세안 출신 중 34.7%, 전체 체류외국인 중 8.9%), 태국인이 209,909명(메콩 5개국 중 40.9%, 아세안 중 32.7, 전체 체류외국인 중 8.3%임.
-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 이주 관련 이슈 중 구체적인 이슈가 확정되면 그 이슈를 추진하기 위한 대상국을 선정하고, 대상국들과의 비형식적, 비정기적 대화를 통해 소다자협력체를 출범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 소다자협력체가 출범하고 발전하는 궤적은 이슈 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됨. 심



화된 경제 협력의 경우 참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가의 수는 비교적 한정적일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클럽재의 성격을 띠는 심화된 경제 협력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비해 소다자 이주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같이 많은 국가가 참여할수록 그 효과가 증폭되는 소다자협력체의 경우, 초기 몇몇 국가가 참여하여 다수의 국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공공재 공급의 형태로 시작하여, 다른 국가들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참여하기 시작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4.3.4 소다자 경제 협력: 회복탄력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체 구축

##### (1) 목적 및 배경

- 소다자 경제협력은 미중갈등이라는 지역 내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갈등의 등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제 관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음. 중국과 미국 경제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임.
-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목격된 급작스러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군사, 경제적 갈등 상황 속에서 급속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resilient), 견고한 (robust)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 볼 수 있음. 회복력 강하고 견고한 지역 내 공급망 구축은 지역 내외 정치,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쉽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역내 국가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미국과 중국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협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이 추진 과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 협력을 비롯한 연성 이슈에 대한 협력은 장기적으로 아세안 및 주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을 늘려가고, 이와 동반될 인적 교류의 증가는 협력 참여국가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것임.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점차 높은 수준의 어려운 협력 (정치, 안보 협력)으로 협력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 참여 국가

- 기준: 현재 상대적으로 큰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으로 지역내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국가들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 구조의 상호보완성 고려
  - KIA 1: Korea, Indonesia, Australia
  - KIVA: Korea, Indonesia, Vietnam, Australia
  - KIA 2: Korea, India, Australia
- KIA 1의 조합은 기존의 방산협력 등에 경제적인 측면을 더한다는 잇점이 있음. KIVA의 경우, KIA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아세안 국가 중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를 잇고, 서비스, 제조업, 첨단산업, 천연자원, 1차산업 등 모든 산업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점에서 매력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 KIA 2의 경우, RCEP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의 FTA에 대한 거부감으로 참여 의사를 철회한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호주가 참여하는 조합임. 특히 호주와 인도의 경제적, 인적, 자원적 연관성과 한국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한국과 호주의 합작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이러한 합작투자의 방식은 인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주요 의제

- 한국과 호주, 한국과 인도,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모두 기존의 FTA로 이미 연결되어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RCEP을 통해서도 인도를 제외하고 다시 한 번 연결되게 됨.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견고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은 단순한 자유 무역협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다층적이고 심도있는 경제 협력체가 되어야 함. 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투자 권선텩, 인력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체를 구상해야 함을 의미함.
- 또한 이러한 소다자경제협력체의 구축이 다른 분야의 소다자협력 (KIA의 방산협력, 비전통안보협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3.5 소다자 연성비전통 안보 협력: 소다자 이민거버넌스의 구축<sup>10)</sup>

### (1) 목적 및 배경

- o 지역 내 떠오르는 이슈(emerging issue)에 대해서 실험적인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소다자협력을 적극 활용.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이주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다자협력체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 o 기본적으로 노동이주민을 중심으로 볼 때, 이주민 송출국의 이익과 이주민 수입국의 이익이 서로 달라 협력 및 갈등의 가능성이 혼재하며, 이주민 수입국 간에도 경쟁 및 협력의 가능성이 혼재함.
- o 이러한 지역 내 이주 이슈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중심 의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한국 정부는 한국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을 통해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들과의 사람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o 또한 지역 내 이주 이슈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이주민 수입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저출생 고령화의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함.
- o 선제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이러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 참여 국가

- 이민수입국 소다자협의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 한국-송출국 이민거버넌스 구축: 한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 (3) 주요 의제

- o 이민수입국 소다자협회의 경우 서로 좋은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할 수도, 공동의 재원 마련, 운영,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협력을 할 수도 있음. 우선 가능한 쉬운 분야의 협력으로 국가들간 이주민 데이터 공유, 정책 조율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통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보다 심도 있는 협력으로 진화할 계

---

10) 이병하 교수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020년 9월 11일).

획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 o 한국과 이주민 송출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적인 출입국 행정 시스템 보급과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이주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불법적인 요소가 이주에 개입할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하여 관련 초국경범죄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4.3.6 소다자 경제 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협력

##### (1) 목적과 배경

- o ASEAN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현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극 개발하고자 하며 이는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이어 높아지고 있는 인프라 부문 투자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의 인프라 건설을 통한 물리적 연계성 개선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곽성일 외 2018).
- o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인프라 부문 높은 관심도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이탈리아는 인프라 협력 촉진 중에 있으며, 한국은 2018년 9월 ASEAN 인프라 장관회의와 11월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해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 o ASEAN과 인프라 부문 협력 추진 국가들 중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국가 관계적 불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인프라’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중견국으로서 안보 및 경제 촉진을 위해 협력을 추구한 호주의 협력사례를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관찰하고자 함.

##### (2) 참여 국가

- o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 o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동티모르 사건<sup>11)</sup>, 발리 테러<sup>12)</sup>, 그리고 불법이민 문제<sup>13)</sup>와 같은

11)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 합병을 적극 지지하였던 호주가 갑작스럽게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며 인도네시아로부터 비난을 받은 사건

12) 호주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발리에서 테러 발생으로 많은 호주인들이 희생되며 불편한 감정이 발생한 사건

사건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리적 밀접성과 호주의 태생적인 안보 불안감<sup>14)</sup>으로 인해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를 통해 동북아에 진출하고자 함. 그러나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경제구조<sup>15)</sup>와 호주 국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sup>16)</sup>과 같은 문제로 인해 관계 개선에 문제점들이 존재하였음.

- o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인구, 영토, 경제 등 대부분 방면에서 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다자협력의 첫 파트너로의 메리트가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다자형태의 국제 협력에 중점을 두었기에 소다자협력에 대해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 그렇지만, 최근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호주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어 한국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호주-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3국 간 소다자 인프라 구축 투자 협력을 구상해 볼 수 있음.

### (3) 주요 의제

- o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인프라 확충의 주요 국정 과제 추진과 더불어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부처 설립에서 보이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관심은 동북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호주와 ‘인프라’라는 공통된 기반(common ground)을 마련하였음.
- o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이외 ASEAN 국가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더불어 인프라 부문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ASEAN 내 다양한 연계성 사업들로 인해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ASEAN 전체와 2018년 ASEAN-호주 특별정상회의(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Initiatives)를 개최를 통해 인프라 부문 협력을 형성함.

13)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들을 통해 많은 중동사람들이 불법이민을 시도하며 2000년대 초반 특히 인도네시아와 불편한 관계가 구축됨.

14) 호주는 지리적으로 열려있는 해안선과 인구에 비해 넓은 영토로 인해 안보적으로 취약하며, 특히 태평양 전쟁 당시 호주에 대한 일본의 위협이 있었기에 미국과의 전쟁 세력 국가의 침략이 있을 경우 연약한 국경 보안 능력에 있어 태생적인 안보불안감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안보 취약성과 일본에 의한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호주는 중국의 부상과 같은 동북아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15) 인도네시아와 호주 모두 미네랄 자원 수출에 주력하는 경제구조로 상호보완적이지 않기에 기존 호주에 인도네시아는 10대 무역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무역이 잘 발생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더 많은 경제적 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16) 1970-80년대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일반국민 차원에 있어 지리적 관계로 인해 높은 관심이 존재하였으며 단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였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호주인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매우 감소함.

- o 참고로 해당 정상회의에서는 테러방지, 안보, 그리고 경제협력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제협력의 경우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부문이 강조되었음. 호주는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서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Leighton Asia과 같은 기업은 약 680만 달러의 인프라 프로젝트 및 Aurecon Group의 항구개발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에 있음(Rakhmat and Turdmuzi 2019/12/18).
- o 호주와 미국은 안보분야 동맹국이며 호주는 30% 이상의 중국과의 높은 무역 의존도에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확실히 강조하는 국가이나 현재 ASEAN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는 수출과 투자에 있어 미국과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가 존재함.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더욱 활발한 인프라 투자 협력과 이외 ASEAN 국가에도 확장되는 중국의 영향에 있어 미국과 호주가 협력적 동맹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Rakhmat and Turdmuzi 2019/12/18).
- o 비록 호주와 한국 모두 중견국 정치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양국 모두 미중사이에 위치한 중견국으로서 호주의 대 ASEAN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 팽배하였던 국가 간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인프라는 공통관심사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호주의 전략은 인프라 시장 확대와 더불어 ASEAN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중견국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국이 주시해야할 전략으로 보이며, 지역 내에서 비슷한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인프라구축 등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 보임.

#### 4.3.7. 스마트 시티 (Smart City) 구축 협력

##### (1) 목적 및 배경

- o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들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아세안에서도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싱가포르가 제안, 주도하여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 ASCN) 사업이 발족하였음.
- o ASCN은 26개의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들과 아세안 외부 파트너들 간의 트윈닝(Twinning) 프로그램을 통해 1:1 혹은 1:다(多) 매칭을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과 노

하우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외부 자원 및 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이는 각 도시 및 국가, 그리고 외부 파트너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형식임 (Lee 2018).

- o 2019년 11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개최되고 2020년 4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관의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에 23개국으로부터 80건의 사업이 접수되는 등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력은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음.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스마트 시티 관련 소다자-다자 협력을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제고됨.

## (2) 참여 국가

- o 한국, 아세안 10개국 + 인도

## (3) 주요 의제

- o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정례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2019년에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협력 플랫폼인만큼 앞으로도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회의를 정례화하고 한-아세안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아세안 4개국 내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시 사업성과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및 사업전개를 진행해야 함.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정의와 관심 분야가 다르므로 지역의 필요에 특화된 스마트 시티 사업 및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별 수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o K-City Network 사업 확장: 국토부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모집했던 K-City Network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을 위해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해외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음. 모집기간 동안 총 23개국에서 80건의 사업문의가 왔고 이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가 사업문의를 하였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11개국으로부터 스마트 도시개발형 6개 사업 및 스마트 솔루션형 6개 사업을 선정함으로 연내 스마트 시티 계획수립 지원을 완료할 예정임. 이번 공모의 특이점으로는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 국가의 사업공모 접수가 39건으로 약 절반에 달하는 만큼 아세안의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대한 관심도가 신남방지역에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국가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정된 신남방 국가(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

스)를 포함한 선정되지 않은 국가(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에게도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향후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수출 및 협력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지해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또한 인도도 K-City Network에 사업문의를 한 만큼 인도가 가지고 있는 아세안과의 교류채널(예: 메콩-강가 협력)들을 활용하여 지역 협력을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o ASCN 공급자 다양화: ASCN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력, 인프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의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실제로 ASCN의 트위닝 프로그램도 주요 선진국의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한나 2018). 실제로 ASCN을 주도한 싱가포르 및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은 기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는 반면에 한국은 LH공사와 국토연구원이 참여함.

<표19> ASCN 국가별 공급자 참여기관

국가명	기관종류				
	기업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	기타(연구기관, 협회)	계
싱가포르	10	9	1	1	21
미국	12			4	16
유럽	10	1	1	1	13
중국	4		1		5
일본	2	1			3
한국		1		1	2
인도	1				1
캐나다		1			1
호주	1				1
국제기구		3	1		4
총계	40	16	4	7	67

출처: (주한나 2018)

- o 스마트 시티는 전통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공학만이 아닌 정보시스템, 차세대 금융,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여러 분야의 국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아세안 국가와 연결해주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임. 또한 스마트 시티 구축의 경험이 있는 주요 광역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앙정부(국토부, 국토연구원, LH공사 등), 지방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각 지방연구원, SH공사 등), 관련 사기업들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4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소다자협력 추진 구체 방안 제안

##### 4.4.1 한-아세안 우주개발/위성항법시스템 협력기구(ASEAN-Korea Space Development/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Cooperation Organization)

###### (1) 목적 및 배경

- o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 들어 인공위성을 적극적으로 발사하고 있음(Pennington 2020; Bangkok Post 2020/9/3). 비근하게 미얀마는 인공위성 미얀마-샛2(Myanmar-sat2)를 2019년 8월에, 태국은 인공위성 나파-1(Napa-1)를 2020년 9월 발사하였음. 하지만 현재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자체 역량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여러 난관이 존재함. 그렇기에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 o 역내·역외 국가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자체적인 역량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역내·역외 국가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협력은 기술선도국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한국이 주도하는 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우주개발협력의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 적극적인 아세안 국가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음.
- o (가칭) 한-아세안 우주개발협력기구 또는 위성항법시스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협력기구의 추진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발표된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함(청와대 2019/11/26).

###### (2) 참여 국가

- o ASEAN + 한국 + α(미국, 일본, 인도, 호주)
- o ASEAN + 한국·일본 nexus + α

###### (3) 주요 의제

- o (정보공유) 한국이 가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정보공유의 범위에는 기후정보, 지진 정

보를 위시한 재난 정보, 인간 안보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정보공유는 역내·역외 국가들이 추진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과도 궤를 같이할 수 있음.

- o (위성항법시스템 협력) 위성항법시스템은 지구 궤도를 도는 다수의 인공위성에서 송신하는 전파 신호 활용 PNT, 즉, 위치(position)-항법(navigation)-시각(timing)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은 아세안 각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과의 소다자 협력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안형준 외 2020).
- o (교육협력) 한국이 아세안 국가에 비해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와 더불어 교육협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예시로 인공위성 설계 분야를 거론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해당 분야 한국 전문가와 아세안 회원국가의 전문가들 간의 교류 활성화, 아세안 회원국가 인재들을 초청(국비유학)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o (우주센터 활용) 우주센터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파키스탄, 프랑스, 벨기에 등 소수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 한국은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Naro Space Center)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위성 혹은 우주발사체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음.
- o (공동개발) 장기적으로 (가칭) 한-아세안 우주개발협력기구는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 및 활용을 넘어서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만 인공위성과 로켓의 공동개발과 같은 과업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는 없음. 그렇기에 중단기적으로는 한-아세안 우주개발협력기구 차원의 공용위성의 발사를 통해 신뢰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4.4.2 한-아세안 원자력개발협력기구(ASEAN-K Nuclear Energy Development Cooperation Organization)

##### (1) 목적 및 배경

- o 동남아 국가들은 최근 급속한 경제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가 부재함. 지금과 같은 경제개발이 진행될 경우 향후 2030-40년 천연자원의 감소 및 환경문제로 에너지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결국 원자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임. 그 예로, 2018년 베트남 전 과학 기술부 장관인 Nguyen Quan은 천연자원의

감소가 전력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통적 에너지원 감소에 따라 원자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필요성을 경고함(VNEXPRESS 2020). 이에 따라 베트남 산업 통상 자원부는 전력 계획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40년까지 1,000MW, 2045년까지 5,0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VNEXPRESS 2020).

- o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동남아 지역에서 강조되었음.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부각된 안전문제로 동남아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시도들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 그 예로, 2018년 4월 아세안 에너지 센터(ACE)는 중장기적 아세안 민간 원자력 발전 상황에 대한 포괄적 설명 제공을 위해 “아세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최초의 공식 보고서로 발표하였음. 해당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 같은 아세안 절반의 원자력 부문 선두 지역에서는 원자력 인프라와 같은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지 첫 번째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2035년에는 두 개의 발전소 운영을 목표하고 있으며,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또한 원자력 사용에 대해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음 (Asean Centre for Energy 2018). 향후 2030-40년 아세안 10개국 모두 원자력발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SCMP 2019/7/22).
- o 2019년 World Nuclear Association에서 발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원자력 부문 세계에서 가장 역량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가동 가능한 24개의 원자로 (23.2GWe)와 건축 중에 있는 4개의 원자로 (5.6GWe)를 통해 전력수요의 25% 미만을 원자력으로 충족하고, 해당 기술의 수출을 통해 현재 200억 달러 계약으로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의 원자로 건설에 참여 중에 있음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9).
- o 동남아 국가들의 원자력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증가와 해당 지역 다수 국가의 체제 특성상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추진력에 따라 한국은 원자력 기술 부문 선진국으로서 해당 부문 역내 국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원자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재부상하고 있는 단계로 해당 단계에서 한국의 기술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은 당장 어려울 수 있으나, 첫 단계로 차후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 및 원자로의 안전성과 같은 정보 공유 및 토론을 위한 협력 구축이 가능할 것임. 이는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나 이러한 정보공유 및 토론을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유대감 및 신뢰를 통해 향

후 2030-40년 해당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 단계로 원자력 발전소 건축의 수출 및 수입이 이루어지는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원자력 발전의 경우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한국이 모든 기술 방면 선진국은 아니기에 기술적 측면에 있어 차후 해당 협력을 통해 기술협력 또한 가능할 것임. 이에 따라 한국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자력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2) 참여 국가

o ASEAN + 한국

o ASEAN + 한국 nexus + α

## (3) 주요 의제

o (정보공유) 2030-40년 이전 역내 협력의 경우 향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원자력 인프라, 선진화된 조직과 인적자원과 같은 원자력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정보를 한국의 주도 하 아세안 원자력 선두국과 이외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준비 및 관련 정보 습득을 통해 친 원자력을 위한 국내여론 구축이 원활해 질 수 있으며, 한국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원자력 개발도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공유를 통해 소프트파워 측면과 유사하게 신뢰와 친밀도를 형성함을 통해 차후 더욱 원활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 2030-40년 이후 해당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소 수립 이후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 공유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한국 또한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 습득이 가능할 것임.

o (기술수출) 한국은 원자력 기술 부문 선진국으로서 이미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에 수출을 통해 200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현재 10개의 아세안 회원국 모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기에 역내 국가들에 대해 주도적으로 협력을 구축하고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해당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할 필요가 있음.

o (기술협력)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있어 한 개의 국가가 해당 분야 요구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선진국이 될 수 없기에 여러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로 되는 분야로 기술적

측면에 있어 소다자협력이 가능함. 향후 정보공유 및 수출 뿐 아니라 해당 협력을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축에 있어 역내 기술적 협력 또한 가능할 것임.

#### 4.4.3. 대아세안 소다자협력 활성화의 기초 자산 형성 전략으로서의 아세안 유학생 대상 공공외교 활성화 및 다양화

##### (1) 목적 및 배경

- o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선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 파워(hard power) 만이 아닌 소프트 파워 자원과 공공외교 전략 활용도 필요함.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역시 다양한 소프트파워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대아세안 외교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소프트파워 외교의 후발주자로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o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국가 및 사회구성원이 외국인과 직접 교류하는 공공외교 전략이 있음.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장·단기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의 이미지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로써 공공외교에 있어 핵심 대상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6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 중 ASEAN 10개국의 유학생은 총 4만3천여 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표20>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아세안 유학생 통계

국가명	어학연수	대학(전문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기타연수	계
베트남	23,594	10,337	1,910	974	611	37,426
인도네시아	173	484	424	237	297	1,615
말레이시아	210	652	77	40	137	1,116
미얀마	225	298	224	79	4	830
태국	235	165	104	60	152	716
필리핀	80	101	249	125	67	622
싱가포르	58	56	17	5	301	437
캄보디아	50	98	156	33	14	351
라오스	17	25	52	7	1	102
브루나이	—	2	6	—	60	68
총계	24,642	12,218	3,219	1,560	1,644	43,283

출처: (교육부 2019)

- o 상기의 <표20>은 2019년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의 통계를 각 과정별로 정리한 것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오는 학생의 대부분은 베트남(86%)에 치중되어있고 그 뒤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잇고 있음.
- o 베트남 유학생의 치중은 그 동안의 한국과 베트남의 양자간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공공외교 전략의 미흡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이를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아세안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유학생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 참여 국가

- o 아세안-X: 한국 유학생 유치에 관심이 있는 아세안 국가들

## (3) 주요 의제

- o (아세안 유학생 다양화) 유학의 결정요인으론 자국의 인구 규모, 국민 생활수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현재 베트남에 집중되어있는 유학생 분포는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 유학이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인식, 홍보, 및 노력의 부족으로 보일 수 있음. 이를 위해 한국에 유학생을 많이 보내거나 보낼 의향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채널을 활성화 및 다양화하여 신남방정책의 교류 증대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o (우수인재 졸업 후 취업 연계) 2020년 7월 한국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아세안 10개국 대상 장학사업을 출범하여 아세안의 석사학위 소지 교원을 대상으로 박사과정 지원사업을 출범하였음. 이 사업을 확장하여 단순히 유학생들의 귀국을 가정한 지원사업이 아닌 더 많은 우수인재를 한국이 유치하고 또한 졸업 후 한국기업과의 취업연계를 통해 국내기업도 해외 우수인재를 고용할 수 있고 해외인재도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4.4.4 솔루-솔라웨시해 연안 국가들과의 소다자협력 추진방안

## (1) 목적 및 배경

- o 술루-술라웨시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풍부한 수산물과 천연자원, 중요한 무역루트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지역임.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의 사바, 사라왁 지역,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지역 그리고 필리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와도 근접. 동아시아와 호주의 많은 무역선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며, 연안 3국의 어부들이 풍부한 수산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자주 접근하게 되어 해적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지역 내 전략적 중요도가 높음(아시아경제 2017/2/10).
- o 말레이시아의 사바, 사라왁, 필리핀의 남부지역,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지역 등의 공통점은 경제적 빈곤도가 높으며 인프라의 보장이 덜 되어있고, 대부분이 수산, 천연자원 등에 의존함. 말라카 해협에서의 사례에서는 연안 3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모두가 주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공식적인 소다자협력을 진행하기 원치 않으나, 비공식적인 군사협력 등과 양자협력(지원 등)을 통하여 자원과 기술을 확충하여 해적을 소탕해옴(VOA 2017/2/1). 특히 중국은 많은 양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사바, 사라왁 지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함.
- o 술루해에서의 해적행위는 많은 선박들이 다른 해상으로 항로를 변경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일본은 필리핀 남부 섬의 개발과 인프라 정비에 많은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미국은 필리핀 정부에 1백만 달러를 지원, 호주는 향후 6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함(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17; 노컷뉴스 2019/6/4).
- o 말라카 해협에서는 미국 혹은 중국 등과의 군사 훈련과 풍부한 지원, 좋은 경제상황 등을 통해 해적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지만, 술루-셀레베스 지역에서의 현황은 악화됨.

## (2) 참여 국가

- o 아세안-X: 해당 지역에 이익과 관심이 존재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역외국가들

## (3) 주요 의제

- o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3국은 현재 인프라 측면 이외에도 군수시장에 대한

협력 수요가 존재(KOTRA 2016). 국내정치적 변동으로 인한 중국과 미국과의 군수협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군수 측면에서의 지원을 약속하며 3국과의 소다자 협력체 구성도 모색할 수 있음. 한국은 양자협력을 통한 기초적인 신뢰관계를 형성 후 비전통안보 측면에서의 해양 거버넌스, 어업, 군수산업 등에서 다양한 소다자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V. 참고문헌

### [국문]

#### 1. 단행본

- 곽성일·정재완·이재호·김제국·김미림. 2018.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2011.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백우열·이기태·이재현·정구연. 2019.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ASAN Report.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9. 『2019 아세안 개황』. 서울: 외교부.
- 한용섭·이신화·박균열·조홍제. 2010. 『마약·조직범죄·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서울: 대외정책경제연구원.

#### 2. 논문

- 강수정. 2020. “코로나19와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 『성균차이나브리프』 제8권 3호, 53-57.
- 강철구. 2015. “일본의 대 아세안(ASEAN) ODA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132-145.
- 김도연·한형민. 2018. “뱅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발전 현황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기초자료』 제2018권 30호, 18-30.
- 김동엽. 2017.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291-327.
- 김석수. 2010. “말라카해협의 안보협력.” 『동남아연구』 제20권 1호, 39-68.
- 김석수. 2016. “남중국해와 일본의 해양안보.” 『일본연구』 67권, 7-31.
- 김한수. 2019. “아세안의 초국가적 안보 이슈 협력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제98권, 167-187.
- 민병원. 2018. “소다자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개념, 기능, 효과.” 『통일연구』 제22권 2호, 177-218.
- 박성관. 2003. “북한의 대동남아 외교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35-253.
- 박재적. 2019.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안보협력: 과거, 현재, 미래.” 『통일연구』 제23

권 1호, 125-154.

- 백용훈. 2020. “한-메콩(Mekong) 협력과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메콩지역 인구의 인적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30권 2호, 287-325.
- 서승원. 2020. “한국과 일본의 대 아세안 안보정책: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비교일본학』 제48권, 57-80.
- 우양호·김상구. 2014. “연안정부간 새로운 월경협력과 파트너십의 형성: 동남아시아 초국경 성장삼각지대의 사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1권 2호, 79-100.
- 이기태. 2019.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정치정보연구』 제22권 3호, 243-270.
- 이기태. 2020.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소프트 안보협력.” 『일본학보』 제122집, 265-283.
- 이병하. 2019.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담론 201』 제22권 1호, 7-43.
- 이요한. 2015. “메콩 유역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 전략과 한국의 입장.” 『글로벌정치연구』 제8권 2호, 109-141.
- 이진영·손혁상. 2019.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 아세안(ASEAN) 국가 간 관계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9집 4호, 133-172.
-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2018.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2호, 5-40.
- 정구연. 2020. “아세안 국가들의 헤징과 동아시아 안보아키텍처의 변화 전망: 대미·대중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호, 27-51.
- 최재덕. 2019.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연계 모색: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4호, 321-356.
- 최재덕. 2020. “미중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35권 2호, 173-204.
- 함중영. 2017.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北韓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 『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 99-157.
- 현민. 2019.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과 역외의존적 지역개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3호, 237-277.

### 3. 기타자료

#### <전자자료>

- 교육부. 2019.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79011> (검색일 2020년 9월 11일).
- 김형중. 2018. “아세안-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 <http://diverseasia.snu.ac.kr/?p=1496> (검색일: 2020년 8월 21일).
- 노컷뉴스. 2019. “필리핀 식탁에 日 수산물...관광 ‘보이콧’ 부르나.” <http://www.nocutnews.co.kr/news/5162083> (검색일: 2020년 8월 21일).
- 성기영. 2017.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과 對아세안 북핵 외교.” <http://repo.kinu.or.kr/handle/2015.oak/8521> (검색일: 2020년 8월 21일).
- 아시아경제. 2017. “해적사고 1998년 이후 최저...“납치 후 돈 요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911134291630> (검색일 2020년 9월 11일).
- 안형준·송치웅·유지영·김태양. 2020.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자원 확보 전략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지원과제.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jsessionid=531352EA7076C6D77C6961A8750A9BDB.node02?cond\\_research\\_name=&cond\\_organ\\_id=&cond\\_research\\_year\\_start=&cond\\_research\\_year\\_end=&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34772&research\\_id=1721000-201900038&pageIndex=3&leftMenuLevel=110](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jsessionid=531352EA7076C6D77C6961A8750A9BDB.node02?cond_research_name=&cond_organ_id=&cond_research_year_start=&cond_research_year_end=&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34772&research_id=1721000-201900038&pageIndex=3&leftMenuLevel=110) (검색일 2020년 9월 11일).
- 연합뉴스. 2012. “필리핀, 中 해커 공세에 사이버 보안 강화.” <http://www.yna.co.kr/view/AKR20120514063100084>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연합뉴스. 2017. “日·印, 일대일로 맞서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벨트” 추진.” <http://www.yna.co.kr/view/AKR20170525056800009> (검색일: 2020년 8월 21일).
- 주아세안대표부. 2020. “아세안 10개국 대상 장학사업 출범식.” [http://overseas.mofa.go.kr/asean-ko/brd/m\\_2566/view.do?seq=13452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overseas.mofa.go.kr/asean-ko/brd/m_2566/view.do?seq=13452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0년 9월 11일).
- 주한나. 2018. “아세안의 도시와 스마트시티.” <http://diverseasia.snu.ac.kr/?p=1006>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청와대. 2019. “문 대통령-메콩정상 ‘한강·메콩강 선언’...7대분야 협력 강화.”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945> (검색일: 2020년 8월 10일).
- 청와대. 2019.11.2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7666>

- 최경희. 2020. “코로나19와 아세안 초기 대응의 성과와 함의: 의장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례와 아세안의 길.” <http://diverseasia.snu.ac.kr/?p=3940>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외 발생 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한겨레. 2020. “중국 보란듯...미 “인도-태평양관 나토 동맹 추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60271.html#csidxf6f9b4685804cbdb8ed9274e501e9f3> (검색일: 2020년 9월 11일).
- 한국경제. 2018. “필로폰값 동남아의 6배...해외 마약조직 놀이터 된 한국.”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02693461>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a. “[아시아 시장\_베트남] 2019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시장 동향조사” [http://www.kisa.or.kr/public/library/GBCT\\_View.jsp?mode=view&p\\_No=126&b\\_No=126&d\\_No=166&cPage=&ST=TC&SV=](http://www.kisa.or.kr/public/library/GBCT_View.jsp?mode=view&p_No=126&b_No=126&d_No=166&cPage=&ST=TC&SV=)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b. “[아시아 시장\_캄보디아] 2019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시장 동향조사” [http://www.kisa.or.kr/public/library/GBCT\\_View.jsp?mode=view&p\\_No=126&b\\_No=126&d\\_No=121&ST=TC&SV=](http://www.kisa.or.kr/public/library/GBCT_View.jsp?mode=view&p_No=126&b_No=126&d_No=121&ST=TC&SV=)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2017. “필리핀, 솔루션 해적활동 저지를 위해 타국과의 공조 강화.” <http://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1&idx=1499> (검색일: 2020년 09월 11일).
- ASEAN-Korea Center. “한-메콩 협력 약화.” <http://www.aseankorea.org/kor/ASEAN/asean.asp> (검색일: 2020년 9월 1일).
- KOTRA. 2016. “말레이시아, 군수시장의 성장과 잠재력.”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5806> (검색일: 2020년 09월 11일).
- VOA. 2017. “필리핀 대통령 “중국에 해적 대응 지원 요청.” <http://www.voakorea.com/world/asia/3701612> (검색일: 2020년 09월 11일).

## <전문가회의>

- 박재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자문회의 (2020년 9월 11일).
- 이병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자문회의 (2020년 9월 11일).
- 서지원 교수(창원대학교) 자문회의 (2020년 9월 24일).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자문회의 (2020년 9월 24일).

## [영문]

### 1. 단행본

- Chang, Lennon Y. C. 2017. *Cybercrime and Cyber Security in ASEAN*. New York: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Geddes, Barbara,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2018.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ndleberger, Charles.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uong, Hai Thanh. 2019a. *Transnational Drug Trafficking Across the Vietnam–Laos Border*. New York: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elling, Thomas C. 1978. *Micromotives and macrobehavior*. New York: Norton.
- Stein, Arthur A. 1990.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1999.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 논문

- Biba, Sebastian. 2018. “China’s ‘old’ and ‘new’ Mekong River politics: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 from a comparative benefit–sharing perspective.” *Water International* 43(5), 622–641.
- Caporaso, James A. 199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51–90.

- Caporaso, James A. 199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51–90.
- Chang, Felix. 2013. "The Lower Mekong Initiative & U.S. Foreign Policy in Southeast Asia: Energy, Environment & Power." *Orbis* 57(2), 282–299.
- Chheang, Vannarith. 2018. "The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ISEAS* 2019(30), 1–8
- Chheang, Vannarith. 2019. "Minilateralism in Sou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VI Perspective* 2019(4), 1–11.
- Cicero, Anita et al. 2019. "Southeast Asia Strategic Multilateral Dialogue on Bio security." *Emerging Infectious Infect Diseases* 25(5), 5–10.
- Cook, Malcolm and Hoang Thi Ha. 2020. "Beyond China, the USA and ASEAN: Informal Minilateral Options." *ISEAS* 2020(63), 1–9
- Dent, Christopher and Peter Richter. 2011. "Sub–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al Regionalism: The Case of BIMP–EAG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Strategic Affairs* 33(1), 29–55.
- Green, Michael J. 2014. "Strategic Asian triangles." In Saadia Pekkanen, John Ravenhill, and Rosemary Foot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 Baogang. 2018. "Chinese Expanded Perceptions of the Region and Its Changing Attitudes Toward the Indo–Pacific: a Hybrid Vis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do–Pacific." *East Asia* 35(2), 117–132.
- Ho, Joshua. 2004. "Operationalising The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I DSS Commentaries* 2004(18), 1–4.
- Hymans, Jacques. 2013. "The Threat of Nuclear Proliferation: Perception and Reality."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27(3), 281–298.
- Jimbo Ken. 2015. "Japan–US–Australia Cooperation on Capacity Building in Southeast Asia." In Yuki Tatsumi (ed), *US–Japan–Australia Security Cooperation: Prospects and Challenges*. Washington DC: Stimson Center, 61–76.
- Joanna Dobkowska. 2014. "Hedging China? The Meaning of the ASEAN Member States' Interests in Forging Their Policies Toward China," In Dominik Mierzejewski (ed), *The Quandaries of China's Domestic and Foreign Development*. Poland: University of Lodz Press.

- Krasner, Stephen. 1983.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 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21.
- Krause, Joachim. 2004. "Multilateralism: Behind European Views." *Washington Quarterly* 27(2), 43–59.
- Lee–Brown, Troy. 2018. "Asia's Security Triangles: Maritime Minilateralism in t he Indo–Pacific." *East Asia* 35(2), 163–176.
- Lee, Eun–Young. 2018. "ASEAN Smart Cities Network: Deepening Cooperation and Providing Opportunities." *ASEAN Talks* 2018(5), 1–48.
- Luong, Hai Thanh. 2019b. "Drug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fficking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sian Survey* 59(4), 717–737.
- Matthews, Alfred Daniel. 2015. "Indonesian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T he Malacca Straits." M.A. Thesis, Monterey: Naval Postgraduate School.
- Medcalf, Rory. 2014. "In defence of the Indo–Pacific: Australia's new strategic map."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8(4), 470–483.
- Middleton, Carl and Jeremy Allouche. 2016. "Watershed or Powershed? Critical Hydropolitics, China and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 Framework'." *T he International Spectator* 51(3), 100–117.
- Moret, Erica. 2016. "Effective Minilateralism for the EU: What, When and Ho w."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Brief* 2016(17), 1–4.
- Mueller, Lukas Maximilian. 2019. "ASEAN centrality under threat – the cases of RCEP and connectivit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8(2), 177–198.
- Mueller, Lukas Maximilian. 2020. "Challenges to ASEAN centrality and hedging in connectivity governance – regional and national pressure points." *The Pacific Review* (Available via Online First), 1–31.
- Murphy, Ann Marie. 2017. "Great Power Rivalries, Domestic Politics and South east Asian Foreign Policy: Exploring the Linkages." *Asian Security* 13(3), 165–182.
- Naim, Moisés. 2009. "Minilateralism." *Foreign Policy* 173(July/August), 134–135.
- Paik, Wooyeal and Jaejeok Park. 2020.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 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 t, and Regional Balancing."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Available via On line First), 1–17.

- Patrick, Stewart. 2015. "The New 'New Multilateralism': Minilateral Cooperation, But at What Cost?" *Global Summitry* 1(2), 115–134.
- Prachason, Sajin. 2008.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 Another Perspective from Thailand." In Alexander C. Chandra and Jenina Joy Chavez (eds.), *Civil Society Reflections on South East Asian Regionalism: ASEAN@40*. Quezon City, Philippines: South East Asian Committee for Advocacy (SEACA).
- Rai, Ashok. 2018.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2 (Quad 2.0) – a credible strategic construct or mere "foam in the ocean?" *Maritime Affairs: Journal of the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of India* 14(2), 138–148.
- Satake, Tomohiko and John Hemmings. 2018. "Japan–Australia security cooperation in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texts." *International Affairs* 94(4), 815–834.
- Scott, David. 2019. "Indonesia Grapples with the Indo–Pacific: Outreach, Strategic Discourse, and Diplomacy."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8(2), 194–217.
- Smith, Shannon. 1997. "The Indonesia–Malaysia–Singapore Growth Triangle: A Political and Economic Equation."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1(3), 369–382.
- Soong, Jenn–Jaw. 2016.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MS Development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Geo–Economy and Strategy Nexus." *The Chinese Economy* 49(6), 442–455.
- Sucharithanarugse, Withaya. 2006. "Concept and Function of the ACMECS." *South Asian Survey* 13(2), 285–294.
- Tan, Er–Win, Geetha Covindasamy, and Chang Kyoo Park. 2017. "The Potential Role of South–East Asia in North Korea's Economic Reforms: The Cases of ASEAN, Vietnam and Singapore."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2(2), 172–187.
- Tan, See Seng. 2020. "Is ASEAN Finally Getting Multilateralism Right? From ARF to ADMM+." *Asian Studies Review* 44(1), 28–43.
- Upadhyaya, Shishir. 2016.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ian Ocean region: status and prospects." *Journal of the Indian Ocean Region* 12(1), 39–45.
- Watson, Iain. 2015. "Middle Powers and Climate Change: The Role of KIA." *Int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5(3), 505–536.

Wright, Thomas. 2009. “Toward Effective Multilateralism: Why Bigger May Not Be Better.” *Washington Quarterly* 32(3), 163–180.

Yamamoto, Raymond. 2020. “The trajectory of ODA’s strategic use and reforms – from Nakasone Yasuhiro to Abe Shinzō.”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Available via Online First), 1–16.

Yarbrough, Beth and Robert Yarbrough. 1986. “Reciprocity, Bilateralism, and Economic ‘Hostages’: Self-Enforcing Agreements in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0(1), 7–21.

### 3. 기타자료

#### <전자자료>

ASEAN Centre for Energy. 2018. “Study on the Nuclear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n ASEAN.” <http://aseanenergy.sharepoint.com/PublicationLibrary/Forms/AllItems.aspx> (검색일: 2020년 9월 15일).

ASEAN. 2012. “Sou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http://asean.org/?static\\_post=treaty-on-the-southeast-asia-nuclear-weapon-free-zone](http://asean.org/?static_post=treaty-on-the-southeast-asia-nuclear-weapon-free-zone) (검색일: 2020년 9월 9일).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2018.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Initiatives” <http://aseanaustralia.pmc.gov.au/index.html> (검색일: 2020년 9월 26일).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2019. “Exercise Talisman Sabre 2019.” <http://www.defence.gov.au/exercises/ts19/> (검색일: 2020년 8월 5일).

Bangkok Post. 2020. “Air force satellite Napa-1 launched.” <http://www.bangkokpost.com/tech/1979315/air-force-satellite-napa-1-launched> (검색일: 2020년 9월 15일).

Basrur, Rajesh and Sumitha Narayanan Kutty. 2017. “A time of strategic partnerships.” <http://www.thehindu.com/opinion/op-ed/a-time-of-strategic-partnerships/article19722970.ece> (검색일: 2020년 9월 15일).

Bloomberg News. 2020. “Japan, Australia and India to Launch Supply Chain Initiative.”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9-01/japan-australia-and-india-to-discuss-supply-chains-alliance> (검색일: 2020년 9월 2일)

Channelnewsasia. 2018. “Singapore to pump in S\$30m for new regional cybersecurity

- ity training centre.”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ngapore-to-pump-in-s-30m-for-new-regional-cybersecurity-10735308>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Cybersecurity Malaysia. 2019. “CyberNews The Quarterly Newsletter Quarter 4 - 2019.” <http://www.cybersecurity.my/cybernews/2019/Q4/eng/nov.html>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 Ikrami, Hadyu. 2017. “Indonesia-Malaysia-Philippines Cooperation In Combating Maritime Crimes: Lessons From The Malacca Straits Patrol And The Role Of A SEAN.” [http://cil.nus.edu.sg/wp-content/uploads/2017/08/Hadyu-Ikrami\\_Indonesia-Malaysia-Philippines-Cooperation-in-Combating-Mar....pdf](http://cil.nus.edu.sg/wp-content/uploads/2017/08/Hadyu-Ikrami_Indonesia-Malaysia-Philippines-Cooperation-in-Combating-Mar....pdf) (검색일: 2020년 9월 9일).
- Indian Navy. “Exercise Malabar 2019.” <http://www.indiannavy.nic.in/content/exercise-malabar-2019>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Johnson, Gregory. 2019 “25th Anniversary of CARAT Comes to an End.” <http://www.dvidshub.net/news/356657/25th-anniversary-carat-comes-end>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Kapur, Lalit. 2019. “The ASEAN-U.S. Maritime Exercise and Maritime Security,”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http://amti.csis.org/the-asean-u-s-military-exercise-and-maritime-security/>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Khurana, Gurpreet S. 2018. “BIMSTEC and Maritime Security: Issues, Imperatives and the Way Ahead.” <http://maritimeindia.org/wp-content/uploads/2020/05/BIMSTEC-and-maritime-security-issues-imperatives-and-way-ahead.pdf> (검색일: 2020년 9월 9일).
- Limaye, Satu P. and Tsutomu Kikuchi. 2016. “US-Japan Relations and Southeast Asia: Meeting Regional Demands.” <http://www.eastwestcenter.org/publications/us-japan-relations-and-southeast-asia-meeting-regional-demands> (검색일: 2020년 8월 17일).
- Linscott, Lauren. 2019. “United States, Thailand, Singapore launch 25th COPE Tiger exercise.” <http://www.pacaf.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1782279/united-states-thailand-singapore-launch-25th-cope-tiger-exercise/>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Marsudi, Retno. 2018. “Indonesia: Partner for peace, security, prosperity.” <http://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8/01/11/indonesia-partner-for-peace-security-prosperity.html> (검색일: 2020년 8월 17일).

- Martin, Timothy W. and Dasl Yoon. 2020. “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 The Country Has Blended Technology and Testing Like No Other.” <http://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ge-covid-11601044329> (검색일: 2020년 9월 27일).
- Pant, Harsh V. and Premesha Saha. 2020. “India’s Pivot to Australia.” <http://foreignpolicy.com/2020/07/21/indias-pivot-to-australia/> (검색일: 2020년 8월 17일).
- Parameswaran, Prashanth. 2018. “Why the First China-ASEAN Maritime Exercise Matters.” <http://thediplomat.com/2018/10/why-the-first-china-asean-maritime-exercise-matters/>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Parameswaran, Prashanth. 2019. “What Does the 2019 Balikatan Exercise Tell Us About the US-Philippines Alliance?” <http://thediplomat.com/2019/04/what-does-the-2019-balikatan-exercise-tell-us-about-the-us-philippines-alliance/>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Pennington, John. 2020. “Why are ASEAN nations joining the space race?” <http://www.aseantoday.com/2020/08/why-are-asean-nations-joining-the-space-race/> (검색일: 2020년 9월 15일).
- Quilop, Raymund Jose G. “Trilateral Co-operation by Indonesi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Temper Expectations.” [http://www.globalasia.org/v13no1/feature/trilateral-co-operation-by-indonesia-malaysia-and-the-philippines-temper-expectations\\_raymund-jose-g-quilop](http://www.globalasia.org/v13no1/feature/trilateral-co-operation-by-indonesia-malaysia-and-the-philippines-temper-expectations_raymund-jose-g-quilop)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Rakhmat, Muhammad Zulfikar and Ahmad Turdmuzi 2019. “Australia, the US, and the Race for ASEAN’s Infrastructure” <http://thediplomat.com/2019/12/australia-the-us-and-the-race-for-aseans-infrastructure/> (검색일: 2020년 9월 26일).
- ReCAAP. <http://www.recaap.org/>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SCMP. “Will Singapore warm up to nuclear energy to combat climate energy to combat climate change?” <http://www.scmp.com/week-asia/economics/article/3019393/will-singapore-warm-nuclear-energy-combat-climate-change> (검색일: 2020년 9월 15일).
- Stars and Stripes. 2019. “Cobra Gold, one of world’s largest multinational military exercises, kicks off in Thailand.” <http://www.stripes.com/news/pacific/cobra-gold-one-of-world-s-largest-multinational-military-exercises-kicks-off-in-thailand-1.568443> (검색일: 2020년 8월 5일).
- Stars and Stripes. 2019. “Talisman Sabre flexed coalition power in the Indo-Pacific, experts say.” <http://www.stripes.com/news/pacific/talisman-sabre-flexed-coalition-power-in-the-indo-pacific-experts-say>

d-coalition-power-in-the-indo-pacific-experts-say-1.592897 (검색일: 2020년 8월 5일).

The ASEAN Post. 2019. “Lancang-Mekong Cooperation: Blessing or curse?” <http://theaseanpost.com/article/lancang-mekong-cooperation-blessing-or-curse> (검색일: 2020년 8월 11일).

The China-ASEAN Prosecutors-General Conference. <http://www.ca-pgc.org/ywb/ln/> (검색일: 2020년 8월 5일).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http://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20년 8월 17일).

The Economic Times. 2019. “India-Australia bilateral defence exercise will deepen strategic ties.”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australia-bilateral-defence-exercise-will-deepen-strategic-ties/articleshow/68608804.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australia-bilateral-defence-exercise-will-deepen-strategic-ties/articleshow/68608804.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검색일: 2020년 8월 17일).

USINDOPACOM. 2020. “22 Nations Participate Virtually in 19th 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 <http://www.pacom.mil/Media/News/News-Article-View/Article/2281799/22-nations-participate-virtually-in-19th-southeast-asia-cooperation-and-training/> (검색일: 2020년 8월 5일).

VNEXPRESS. 2020. “Vietnam mulls return to nuclear energy after 2035.” <http://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mulls-return-to-nuclear-energy-after-2035-4127854.html> (검색일: 2020년 9월 15일).

World Bank. 2020. “Vietnam.” <http://data.worldbank.org/country/vietnam>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9. “Asia’s Nuclear Energy Growth”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others/asias-nuclear-energy-growth.aspx> (검색일: 2020년 9월 15일).

Worldometer. 2020. “Vietnam.” <http://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vietnam/> (검색일: 2020년 9월 25일).

Wyeth, Grant. 2020. “Will India Invite Australia to the Malabar Naval Exercise?” <http://thediplomat.com/2020/07/will-india-invite-australia-to-the-malabar-naval-exercise/> (검색일: 2020년 8월 5일).

[중문]

## 1. 논문

李春. 2019. “中国与东南亚反洗钱多边合作机制构建.” 『暨南学报』 242, 23—41.

李兴刚. 2018. “‘五国防务安排’的发展与走势分析.” 『南亚东南亚研究』 2018(4). 1—12.

## 2. 기타자료

### <전자자료>

新华网. 2011. “中华人民共和国老挝人民民主共和国缅甸联邦共和国泰国关于湄公河流域执法安全合作的联合声明.”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1/11/id/467329.shtml> (검색일: 2020년 8월 5일).

中新网. 2011. “中老缅泰湄公河流域执法安全合作会议在京召开.” <http://www.chinanews.com/gn/2011/10-31/3425490.shtml> (검색일: 2020년 8월 16일).